
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

2019. 7. 3

관계부처 합동

순 서

I. 2019년 상반기 경제운용 평가	1
II. 작년말 대비 달라진 주요 경제여건	3
III. 최근 경제상황 진단	4
IV. 정책적 시사점	7
V.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	8
1. 경제활력 보강 및 리스크 관리 강화	9
2. 경제체질 개선과 미래대비	23
3. 포용성 강화	32
VI. 경제 전망	46
[별첨1] 2019년, 2020년 경제전망	47
[별첨2] 하반기 집중관리 10대 과제	48
[별첨3] 하반기 주요 정책 캘린더	50
[별첨4] '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 결과	65

I. 2019년 상반기 경제운용 평가

① 「**활력, 체질개선, 포용, 미래대비**」에 역점을 두고 총력 대응

① 투자·소비·수출 등 **경제활력 제고** 위해 **전방위적 지원 강화**

▶ **투자 분위기 확산**

- ① 그간 지체된 GBC(3.7조원, 1월), 반도체클러스터(1.6조원, 3월) 수도권정비촉진 통과
- ② 최초로 대규모 유휴 국유지 활용한 토지개발사업 추진(공공 7.8, 민간 9.0조원, '19.1월)
- ③ 12.6조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 절차를 단축하여 연내 착공 추진
- ④ 상반기 61% 재정집행 추진 → 5월까지 53.0% 집행(계획대비 +4.5%p, 전년대비 +2.2%p)
- 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발표·추진(24.1조원, 23개 사업, '19.1월)

▶ **소비·수출 활성화**

- ①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('18.7월~), ② 무역금융 확대('18년 220→'19년 235조원)
- ② 수출(3월), 제2벤처붐 전략(3월), 관광(4월), 해양레저관광(5월) 등 각종 활력대책 마련

② **규제시스템 전환, 산업혁신 대책** 수립 등 **혁신 확산의 토대** 마련

- ▶ 규제샌드박스 1+4법 입법 완료 및 규제입증책임제 도입('19.1월)
- ▶ 조선산업 활력 제고방안 보완대책(4월), 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(4월),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(6월) 등 산업혁신 대책 수립

③ **청년·여성·신중년 등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지원**을 확대하고, **기초생활보장·기초연금** 등 **사회안전망** 지속 강화

▶ **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지원 확대**

- ① (청년)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('19.5월),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(15.5→25.5만명, '19년)
- ② (여성) 아이돌봄 일자리(2.3→3.0만명, '19년), 노인돌봄 일자리(3.6→3.8만명, '19년)
- ③ (신중년) 노인일자리(51→61만명, '19년), 경력형일자리 지원(2.5천명, '19년 신규)

▶ **사회안전망 지속 강화**

- ① (기초생보)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조기 완화('22.1월→'19.1월)
- ② (기초연금) 25→30만원('19.4월~, 노인소득 하위 20% 대상)
- ③ (한국형실업부조)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 마련('19.6월)

④ **플랫폼경제·신산업 추진전략*** 수립, **8대 선도사업**에 대한 **투자 확대** 등을 통해 **미래 먹거리 발굴 가속화**, **인구정책TF** 가동

* 데이터·AI경제 활성화 계획(1월), ICT산업 고도화 및 확산 전략(1월), 수소경제 활성화 계획(1월), 5G+ 전략(4월), 바이오헬스 산업혁신 추진방안(5월) 등

② 주요 과제들이 대체로 정상 추진되면서 가시적 변화 시작

① 부동산·가계부채 등 리스크 요인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, 관광활성화 노력 등으로 외국인 관광객 증가세 확대

- * 가계신용 증가율(전년비, %) : ('16)11.6 ('17)8.1 ('18)5.9 ('19.1/4)4.9
- * 방한관광객(만명, 월평균) : ('17.1~5)115.2 ('18.1~5)118.7 ('19.1~5)139.3 <+17.3%>

▪ 견조한 대외신인도를 바탕으로 역대 최저 수준의 금리로 외평채(15억불) 발행(6.13일)

- * CDS프리미엄(bp, 5년물, 기말) : ('17)53 ('18.6)49 (12)39 ('19.1)32 (3)34 (5)37 (6)32
- * 역대최고 국가신용등급 유지, 외환보유액 사상 최고 수준(4,020억불, '19.5월)

② 벤처투자금액·신설법인수 역대 최고치 기록, 규제샌드박스 적용 사례 창출(7.2일 기준 68건) 등 혁신 분위기 확산

- * 벤처투자금액(천억원) : ('17.1/4) 4.1 → ('18.1/4) 6.4 → ('19.1/4) 7.5
- * 신설법인수(만개) : ('17.1/4) 2.54 → ('18.1/4) 2.67 → ('19.1/4) 2.70
- * 규제입증책임제 도입을 통해 외국환·국가계약·조달분야 83건 규제 폐지·개선

▪ 세계 최초 5G 상용화 및 핀테크 기업 지속 증가, 수소경제·시스템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대규모 민간투자 유도*

- *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(120조원), 현대차 수소스택 공장증설(7.6조원), 삼성전자 시스템반도체 R&D 및 설비투자(133조원)

③ 최근 상용직 비중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 등 일자리 질이 지속 개선되는 가운데, 일자리 증가세도 점차 회복

- * 상용직 비중(% , 전체취업자수 대비) : ('17) 50.2 ('18) 51.3 ('19.1~5월 평균) 52.4
- *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증감(전년비, 만명) : ('17) 30.6 ('18) 35.9 ('19.1~5월 평균) 51.4

④ 기업지배구조가 지속 개선되는 등 공정경제 성과 확산

- * 대기업집단순환출자고리수 : ('17)93개 → ('18)10개 → ('19)5개

◇ 다만, 작년말 예상보다 크게 악화된 대외여건, 산업·인구 등 구조적 변화 등을 감안하여 일부 과제의 보완·강화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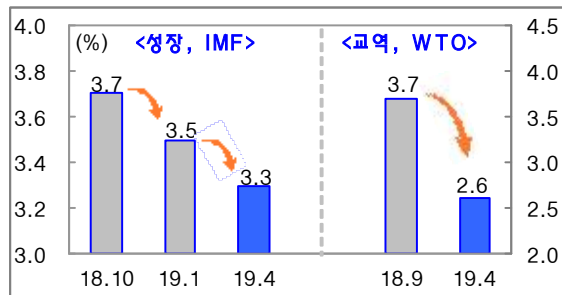
- 경기 하방리스크 확대에 대응하여 전방위적 활력제고 긴요
- 빠르게 진행되는 글로벌 산업트렌드 변화, 현실화되고 있는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한 구조적 대응 노력 강화 필요

Ⅱ. 작년말 대비 달라진 주요 경제여건

□ 글로벌 경기 둔화가 심화되고 하반기 불확실성도 확대 양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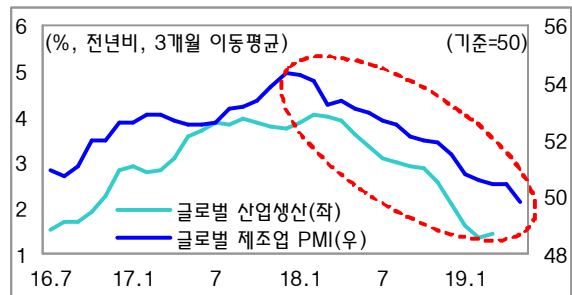
- ① (세계경제) 금년들어 성장·교역 전망이 큰 폭 하향 조정되고, 글로벌 산업생산 및 제조업 경기가 빠르게 하락

'19년 세계경제 성장·교역전망 변화



* 자료: IMF, WTO

글로벌 산업생산·제조업 PMI 추이



* 자료: CPB, IHS

- ② (미중 무역갈등) 미-중간 추가 관세부과('19.6월~) 등 갈등 고조이후 최근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간 무역협상 재개 합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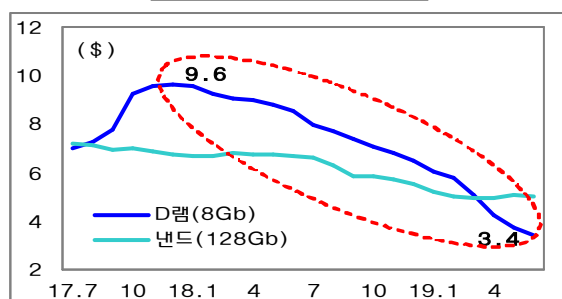
- 대립 국면 일부 완화, but 향후 협상과정과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 상존, 무역갈등이 확대·장기화될 경우 세계경제 회복에 부정적 영향
- 美-中 관세부과 현황

발효시기	美 → 中	中 → 美
▶ '18.7~8	500억불 25%p	500억불 25%p
▶ '18.9.24	2,000억불 10%p	600억불 5~10%p
▶ '19.6.1	↳ 25%p	↳ 5~25%p
▶ (잠정 보류)	3,250억불 25%p 추가부과	-

- ③ (반도체) 글로벌 가격이 빠르게 하락하고 업황전망도 지속 둔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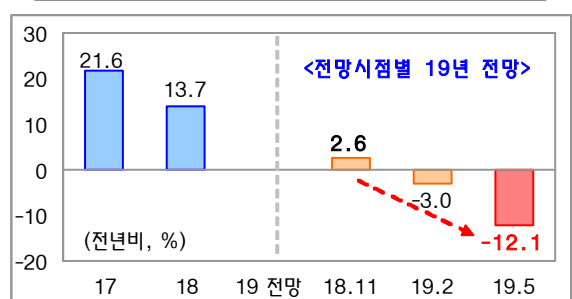
- 하반기로 갈수록 수요회복이 예상되었으나, 중국 경기둔화, 글로벌 서버투자 지연 등이 업황 회복에 부담요인

반도체 가격 추이



* 자료: Dram Exchange

'19년 반도체시장 성장전망 변화



* 자료: WSTS

Ⅲ. 최근 경제상황 진단

[1] 경기

① 대외여건 악화 등으로 투자·수출 중심 성장모멘텀 약화

① (내수) 소비는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나, 투자 부진이 심화되면서 민간부문 활력 저하

* 민간소비/GDP 증가율(전년비, %) : ('17) 2.8/3.2 ('18) 2.8/2.7 ('19.1/4) 1.9/1.7

- **건설투자**는 작년 이후 **지속 감소**하는 가운데, **기업투자**가 급년들어 경영실적 악화, 수출부진 영향 등으로 **크게 위축**

* 건설투자(전년비, %) : ('18.1/4) 1.2 (2/4)△2.5 (3/4)△8.7 (4/4)△5.7 ('19.1/4) △7.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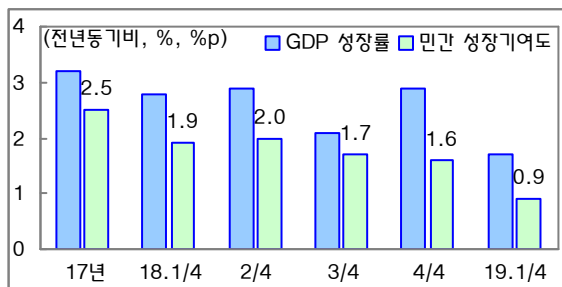
* 설비투자(전년비, %) : ('18.1/4)10.2 (2/4)△4.3 (3/4)△9.4 (4/4)△5.3 ('19.1/4)△17.4

② (수출) 그간 수출 증가세를 이끌어 온 글로벌 반도체 업황의 조정과 세계교역 둔화 등으로 감소세 지속

* '17~'18년 평균 수출 증가율(%) : (전체) 10.5 [<반도체> 42.7 <반도체 제외> 5.1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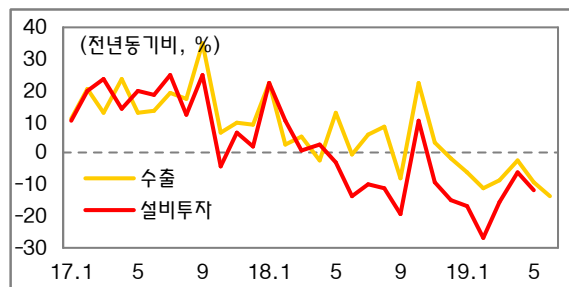
* '19.上 수출 증가율(전년비, %) : (전체)△8.5 [<반도체>△22.5 <반도체 제외>△4.8]

분기별 성장률 및 민간기여도 추이



* 자료: 한국은행

설비투자·수출 추이



* 자료: 통계청, 관세청

② 하반기 하방리스크 확대, 글로벌 무역갈등·반도체 업황이 관건

① 미중 무역갈등이 확대·장기화되고 글로벌 반도체 업황 회복도 지연될 경우, 하반기 수출·기업투자 회복을 제약할 가능성

② 소비는 외국인관광객 증가, 가계소득 개선 등으로 증가세가 지속되겠지만, 기저 영향 등으로 증가폭은 둔화 예상

* 방한 관광객(만명, 월평균) : ('17.1~5)115.2 ('18.1~5)118.7 ('19.1~5)139.3 <+17.3%>

↳ 중국인 관광객(만명, 월평균) : ('17.1~5)40.0 ('18.1~5)35.8 ('19.1~5)46.5 <+30.0%>

[2] 일자리/분배

① 고용은 정책효과 등으로 개선 흐름이나, 저소득층 소득 부진 지속

① (고용) 일자리 정책, 외국인 관광객 회복 등으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2월 이후 취업자 증가세 확대

* 취업자수 증감(전년비, 만명) : ('18)9.7 ('19.1) 1.9 (2)26.3 (3)25.0 (4)17.1 (5)25.9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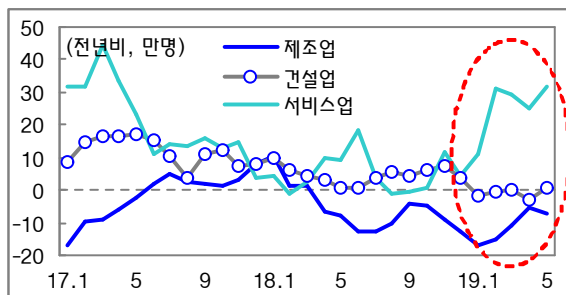
↳ 서비스업 취업자수 증감 : ('18)5.2 ('19.1)11.3 (2)31.1 (3)29.5 (4)25.3 (5)32.0

- 다만, **제조업 고용**은 수출·투자부진 등으로 **감소세**가 지속되고 금년들어 **건설업 고용**도 주택건설 위축 등으로 **둔화**

② (분배) 사회안전망 강화 등에 힘입어 **분배지표**가 개선되었으나, 임시·일용직 일자리 감소 등으로 **저소득층 소득 감소세** 지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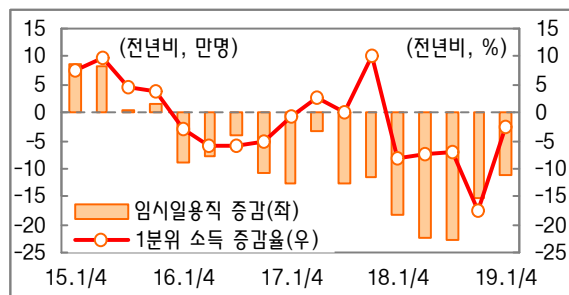
* 5분위배율(배, 1/4분기 기준) : ('15) 4.86 ('16) 5.02 ('17) 5.35 ('18) 5.95 ('19) 5.80

산업별 취업자수 증감 추이



* 자료: 통계청

임시일용직·1분위 소득 증감 추이



* 자료: 통계청

② 방한 관광객 증가, 추경 등은 상방요인이나, 불확실성 상존

① 하반기에도 방한 관광객 증가 추세, 추경을 통한 일자리 지원 확대 등으로 서비스업 중심 고용 증가세 지속 전망

* 추경안 일자리사업 : 노인일자리 사업 3만개 추가지원 및 기간연장(약 2개월), 자활근로(+1만), 희망근로사업(+1만), 신중년사회공헌지원(+0.6만) 등

- 소득분배는 정책 효과 등이 본격화되면서 개선 기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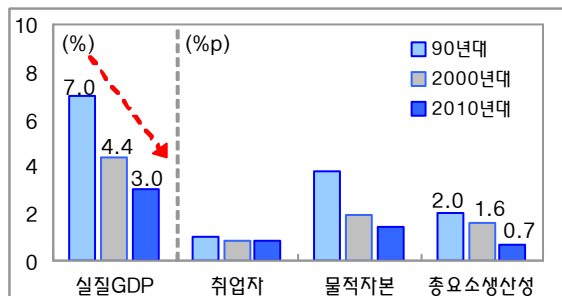
② 다만, 경기 하방리스크 확대, 추경 통과 지연시 일자리사업 집행 차질 등으로 민생여건 개선을 제약할 가능성

[3] 구조적 여건

① 산업구조 전반의 혁신이 지체되면서 성장잠재력 저하 우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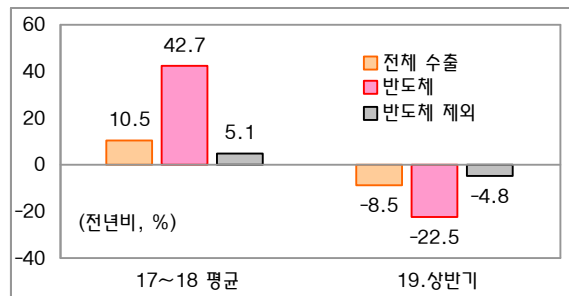
- ① 자동차·조선 등 주력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신산업 발굴이 지체되면서 **총요소생산성 지속 저하**
- ② 최근 반도체 시장마저 조정을 받으면서 **성장동력 약화**

경제성장률 및 성장기여도



* 자료: KDI

수출 증가율



* 자료 : 관세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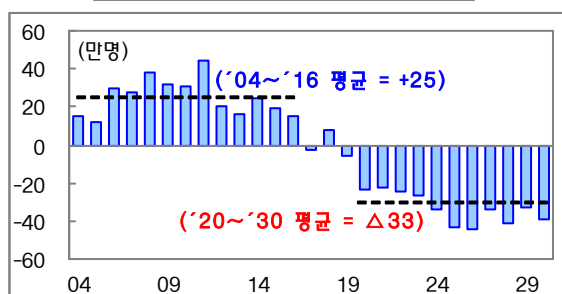
② 인구구조·소비패턴의 빠른 변화가 민생·체감경기 개선 제약

- ① **생산가능인구 감소·고령화**가 가속화되며 **성장잠재력**과 고용·분배 등 **민생여건 개선**에 부담요인
- ② 자영업자 과당경쟁이 지속되는 가운데, **온라인 판매**가 **빠르게 성장**하면서 오프라인에 기반한 **영세 자영업자 어려움 가중**

* 소매판매중 온라인판매 비중(%) : ('01) 1.5 → ('10) 6.4 → ('15) 10.6 → ('18) 18.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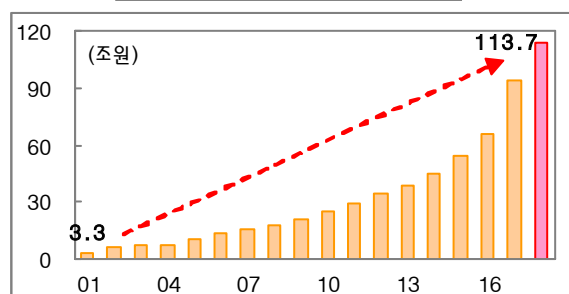
- ③ **미래 도전요인들이 빠른 속도로 현실화**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**우리 경제·사회의 구조변화 대응과 사회적 논의는 미흡**

생산가능인구 증감 추이



* 자료: 통계청, 장래인구추계('17년)

온라인판매 금액 추이



* 자료 : 통계청 ('17년이후는 신계열 기준)

IV. 정책적 시사점

상반기 평가 및 하반기 여건	정책적 시사점
<div data-bbox="212 465 327 577">경제 활력</div> <div data-bbox="371 353 850 409">상반기 평가</div> <ul data-bbox="387 421 786 499"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대부분 활력 과제 정상 추진 ▪ 추경안 국회통과 지연 <div data-bbox="371 533 850 589">하반기 여건</div> <ul data-bbox="387 600 842 745"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글로벌 성장교역 및 반도체 경기 둔화 ▪ 투자·수출 부진 ▪ 방한 관광객수 회복세 ▪ 통상 갈등, 신흥국 금융불안 심화 우려 	<div data-bbox="914 365 1393 454">정책노력에도 불구하고, 하방리스크가 확대됨에 따라 활력제고 노력 강화 필요</div> <ul data-bbox="914 510 1385 712"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추경안 신속통과 지원 ▪ 투자·수출 활성화 과제 보강 ▪ 소비심리 제고 및 관광 인프라 확충 ▪ 대내외 리스크 선제적 대응노력 강화
<div data-bbox="212 913 327 1025">체질 개선</div> <div data-bbox="371 801 850 857">상반기 평가</div> <ul data-bbox="387 869 842 981"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혁신분위기 확산(벤처투자, 신설법인수 역대최고) ▪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개혁 성과 창출 ▪ 분야별 산업혁신 대책 일부 지연 <div data-bbox="371 1014 850 1070">하반기 여건</div> <ul data-bbox="387 1081 842 1193"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특정산업 편중 심화(예: 반도체)에 따른 성장동력 약화 ▪ 글로벌 혁신 경쟁 심화 	<div data-bbox="914 813 1393 902">그간 마련된 혁신 토대위에 혁신 분위기 확산 및 미래 먹거리 발굴 가속</div> <ul data-bbox="914 958 1385 1160"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업그레이드된 혁신 확산전략 마련 ▪ 산업혁신 대책 마련 가속화 ▪ 규제혁파 노력 확대 ▪ 혁신을 뒷받침하는 모험자본 지속 확충
<div data-bbox="212 1361 327 1473">포용 강화</div> <div data-bbox="371 1249 850 1305">상반기 평가</div> <ul data-bbox="387 1317 842 1429"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사회안전망 강화 등은 계획대로 추진 ▪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공정경제 성과 확산 ▪ 최저임금·근로시간 단축 보완 지연 <div data-bbox="371 1462 850 1518">하반기 여건</div> <ul data-bbox="387 1529 842 1686"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최근 취업자 증가는 일부 회복 ▪ 임시·일용직 일자리 지속 감소 ▪ 1/4분기 소득분배 지표가 개선됐으나, 1분위 소득 감소세 지속 	<div data-bbox="914 1261 1393 1350">사회안전망 확충 등은 더 속도내고, 일부 정책의 시장 수용성 제고</div> <ul data-bbox="914 1406 1385 1664"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1분위 일자리·소득기반 강화 ▪ 청년 등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확대 ▪ 서민의 자산형성 지원 강화 ▪ 하도급·가맹 등 거래문화 개선 가속화 ▪ 최저임금 결정·주52시간 관련 보완
<div data-bbox="212 1854 327 1966">미래 대비</div> <div data-bbox="371 1742 850 1798">상반기 평가</div> <ul data-bbox="387 1809 842 1877"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데이터·AI 등 플랫폼경제 기반 강화 ▪ 구조변화 대응 및 사회적 논의 미흡 <div data-bbox="371 1910 850 1966">하반기 여건</div> <ul data-bbox="387 1977 842 2056"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인구구조 변화 등 미래도전 현실화 ▪ 미세먼지 등 환경 이슈 부각 	<div data-bbox="914 1765 1393 1821">미래도전 요인에 대한 대응 노력 강화</div> <ul data-bbox="914 1877 1385 2033"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충격 완화 ▪ 국민 삶의 질 및 성장동력 확충 등을 위한 미래 대응전략 마련

V.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

◇ 「2019년 경제정책방향」의 큰 틀은 견지하면서 최근의 변화된 경제여건에 탄력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적극 보강·보완

- ① **활력제고, 체질개선, 포용강화** 등 3대 방향을 중심으로 추가 정책과제를 발굴·보강
- ② **하반기에 집중 추진·대비할 과제**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발굴하고, 실행력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부위해 **액션플랜**(정책캘린더) 제시
- ③ **구조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** 차원에서 **미래대비 주요 어젠다**에 대한 **추진방향 제시** 및 **사회적 의제화** 본격 추진

☞ 하반기중 **중점 관리**가 필요한 **10대 과제를 별도로 선정**하여 집행 추진상황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성과 창출에 주력

<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기본틀(안) >

3대 정책방향	I. 경제활력·리스크 관리	II. 체질개선과 미래대비	III. 포용성 강화
	① 투자 촉진에 총력 ② 소비 등 내수 활성화 ③ 수출 활력 제고 ④ 지역경제 활성화 ⑤ 리스크 관리 만전	① 혁신성장 가속화 ② 혁신성과 창출 및 확산 ③ 제조업 비전·전략 신속 추진 ④ 서비스산업 혁신 본격화 ⑤ 인구정책 등 사회적 의제화	① 사회안전망 강화 ② 청년 희망사다리 보강 ③ 금융포용성 강화 ④ 공정경제 기반 강화 ⑤ 최저임금·주52시간 보완

+

10대 중점 관리과제	① 10조원+α 수준 투자프로젝트 추진 ② 규제샌드박스 사례 창출·확산 지원 ③ 제조업 업종별 전략 수립 및 4대 선도 신산업 추가 발굴 ④ 서비스업-제조업 차별시정 및 서비스 핵심규제 개선 ⑤ 수출금융 지원 강화 및 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 수립 ⑥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 및 주52시간제 확대 대비 ⑦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확대 및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⑧ 혁신형 사회적경제 모델 발굴 ⑨ 인구정책 TF 과제 추진 및 중장기 분야별 심층전략 수립 ⑩ 대내외 리스크의 안정적 관리
-------------	--

1

경제활력 보강 및 리스크 관리 강화

- ◇ 경기 하방리스크 대응 및 민간 일자리 창출 여력 확충을 위해 투자 활성화에 최우선 방점
 - 확장적 기조의 재정을 차질없이 집행하고, 6.7조원 규모 추경의 신속한 국회통과 지원 및 통과 즉시 집행
 - 투자 세제 인센티브 확대,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 등 민간·공공부문 여력을 총동원하여 투자활력 제고에 역점
 - 소비심리 제고 및 관광활성화 등을 통해 내수 활성화 촉진
 - 수출금융 확대 및 분야별 수출대책 등을 통해 수출분위기 반전에 총력
- ◇ 부동산, 가계부채, 미중 통상마찰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, 대응 관리에 만전

(1) 경제활력 보강

1 확장적 기조 재정의 차질없는 집행 + 6.7조원 규모 추경 신속 집행

- ① 확장적 기조의 재정을 하반기에도 차질없이 집행
- ② 추경의 신속한 국회통과를 적극 지원하고, 추경 효과가 조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통과 후 2개월내 70% 이상 집행 추진

* 정부 추경에 대응한 지자체 추경의 편성·집행도 적극 독려

2 투자 분위기 확산을 위해 민간·공공 부문의 투자여력 총동원

①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(3종 세트) 마련

-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

▶ 공제율(대/중견/중소): (현행) 1/3/7% → (개선) **2/5/10%** (법 개정안 통과일 이후 1년간)

※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 → 최대한 조속한 입법 추진

-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일몰연장

▶ 적용대상 확대

- 생산성향상시설: (현행) 생산자동화 공정개선 시설 반도체제조 첨단시설 등
→ (개선) **물류산업 첨단시설, 의약품 제조 첨단시설 추가**
- 안전시설: (현행) 도시가스공급시설(LNG), 유해화학물질시설 등
→ (개선) **송유관 및 열수송관, LPG시설, 위험물시설 추가**

▶ 일몰연장 : (생산성향상시설, 안전시설) '19말 → '21말

▪ 가속상각제도(내용연수 50%까지 축소) 6개월 한시 확대

- ▶ 대기업: (현행) 혁신성장 투자자산(R&D시설, 신사업화 시설)에 대해 가속상각(50%) 허용
→ (개선) 생산성향상시설, 에너지절약시설 한시 추가(‘19.7.3~12.31)
- ▶ 중소·중견: (현행) 사업용 자산에 대해 가속상각(50%) 허용
→ (개선) 가속상각 허용한도 50→75%로 한시 확대(‘19.7.3~12.31)
- ※ 現 대기업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일몰도 연장(‘19.12말→‘20.6말)

② 10조원+a 수준의 투자 프로젝트 추진

▪ (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) 행정절차 처리, 이해관계 조정 등을 통해 약 8조원 규모의 프로젝트 조기착공 지원

- ① 화성 복합 테마파크* 조성(4.6조원 투자)
* 테마파크, 워터파크, 호텔, 쇼핑몰, 골프장 등(127만평)
▶ (애로해소) 신안산선 테마파크 역사 및 노선계획 미확정
→ 역사개설을 통한 접근성 확보 및 인·허가 지원
▶ (향후일정) 개발계획 변경(‘19.12월) → 인·허가 완료(~’21년) → 착공(‘21년)
- ② 대산 산업단지 내 HPC 공장* 건설(2.7조원 투자)
* Heavy-Feed Petrochemical Complex : 중질유 원료 석유화학단지(15만평)
▶ (애로해소) 공업용수 부족으로 완공 이후 공장가동 차질 예상
→ 공업용수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적기 가동 지원
▶ (향후일정) 용수 공급방안 마련(‘19.下) → 공장 착공(‘19.下) → 완공(‘21.下)
- ③ 양재동 現양곡도매시장 부지에 R&D 캠퍼스* 조성(0.5조원 투자)
* AI, 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 관련 연구기관, 기업 등 입주(1만평)
▶ (애로해소) 양곡도매시장 이전부지 미확보로 R&D 캠퍼스 조성 착수 지연
→ 인근 부지를 확보해 R&D 캠퍼스 조성계획 수립
▶ (향후일정) 양곡도매시장 이전부지 선정(‘19.7월) → R&D 캠퍼스 설계(‘21년) → 착공(‘22년)
- ④ 수도권 소재 MICE 시설 건립 추진
* 회의(Meeting), 인센티브 관광(Incentive tour), 국제회의(Convention), 전시(Exhibition)
▶ (애로해소) 경제성 검토 등 관련 절차 수행으로 사업 추진 지연
→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조기착공 유도
▶ (향후일정) 사업 기본계획 수립 착수 등(‘19.下)

【1단계, 2단계 대규모 민간투자 프로젝트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】

프로젝트명	투자 규모	상반기 경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	
		19.上	19.下
❶ 1단계 투자프로젝트(2.3조원)			
포항 영일만 공장증설	1.5조원	▶ 부지조성공사 착공(‘19.2)	▶ 부지조성 완료 및 공장 착공
여수 항만배후단지 개발·공급	0.35조원	▶ 예비타당성조사 신청(‘19.4)	▶ 사업시행자 선정 및 실시협약 체결
여수 국가산단 입주기업 공장증설	0.45조원	▶ 공장설립에 필요한 공유 수면 매립방안 연구용역중	▶ 매립방안 마련 後 매립 인허가 절차 진행
❷ 2단계 투자프로젝트(6조원)			
글로벌 비즈니스센터	3.7조원	▶ 수도권정비위 통과(‘19.1)	▶ 건축허가 등 완료 및 착공
반도체 특화 클러스터	1.6조원	▶ 수도권정비위 통과(‘19.3)	▶ 농지·산지 전용 협의 등 후속절차 진행
창동 K-Pop 공연장	0.5조원	▶ 민간투자사업 지정(‘19.4)	▶ 우선협상대상자 선정
자동차 주행시험로	0.2조원	▶ 주행시험로 설치를 위한 특구계획변경 신청(‘19.3)	▶ 특구계획 변경에 필요한 요건이행 확인

- (공공기관 투자) 공공주택, SOC 확충을 중심으로 '20년 이후 계획을 앞당겨 당초대비 1조원 이상 추가 확대('19년 연간 53→54+a조원)
- (민간투자사업) 구도심에 위치한 노후·유휴 항만을 인근도심과 연계한 약 0.6조원 규모의 재개발 사업을 연내 추가 착공

※ '20년이후 착공 예정인 4.9조원 규모 항만배후단지 등 민간투자사업도 최대한 조기 착공 추진

- ▶ 인천내항 상상플랫폼(0.04조원, '19.10월 착공)
- ▶ 고현항 항만재개발 3단계(0.22조원, '19.12월 착공),
- ▶ 부산북항 재개발 지하차도 건설공사(0.3조원, '19.10월 착공) 등

- (재정사업) SOC 낙찰차액 재투자, 민간 선투자 사업 등 추진

③ 도시재생·어촌 뉴딜사업, 생활SOC사업 신속 집행 등을 통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유도

-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반기중 148개(3,270억원) 이상 착공, 46개(540억원) 이상 준공 추진

* 연내 단위사업 200개 내외(3,880억원) 착공, 50곳 내외(550억원) 준공

- ▶ (절차 간소화)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의 범위 확대,
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친 도시재생사업은 지방재정투자심사 제외
- ▶ (부지확보 지원) 매입가격 유연화, 공유재산 취득절차 간소화,
특별분양권 범위 확대(기초→광역내 아파트)
- ▶ (예산집행 유연화) 사전 협의된 부지 매입은 지자체 매칭 투자금액으로 인정
- ▶ (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)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 요건 완화(1→2만㎡)

- 생활SOC 사업의 사전절차를 최대한 단축하여 하반기중 2.9조원 신속히 집행

* 연내 총 8.6조원 → 상반기중 5.7조원 기 집행

▪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망 투자 지속 추진

▶ 김포도시철도 개통('19.下), 서울 7호선 청라연장 기본계획 승인('19.7월) 등 수도권 광역교통망 지속 확충

* 진접선(4호선연장), 하남선(5호선연장), 별내선(8호선연장) 등 도시철도 노선 연장도 추진

▶ 광역급행철도망(GTX) A노선(3조원)은 '23년말 개통을 목표로 현장공사를 최대한 신속 진행

▶ 광역급행철도망(GTX) B노선(6조원)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('17.9월~)를 신속히 진행하여 연내 완료 추진

▶ 광역급행철도망(GTX) C노선(4조원)은 '21년 착공을 목표로 하반기중 기본계획 수립 착수,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등 후속절차도 신속 추진

▪ 국유재산 토지개발 사업(11개 지구, 16.8조원)은 3개 지구의 사업계획을 연내 승인, 나머지 지구의 사업계획도 신속 마련

* 부산원예시험장(창업공간 등), 의정부 교정시설(생활 SOC), 원주권 군부지(스마트헬스케어)

▪ 도로·하천·상하수도 등 노후 기반시설*의 유지·보수를 위해 하반기중 3.6조원** 투자

* 국가안전대진단 시행(30년 이상 도로·철도·저수지 등 15종 기반시설 대상)으로 확인된 긴급 보수보강 필요 시설, 노후시설 조기개선 대상 등

** 국비 2.3조원, 공공·민간 1.3조원

▪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 선도사업*(9천억원)은 사업시행자 선정('19.8월), 통합개발계획 수립**('19년말 착수) 등을 거쳐 '20년중 착공

* 새만금 국제협력용지에 인구 2만명 규모의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('19.5월 예타통과)

**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 수립하고, 교통·에너지 등 관련 계획을 일괄 심의함으로써 계획수립기간 단축(2년 이상 → 1년 이내)

④ 하반기중 시설자금 등에 정책금융 10조원 이상 공급을 목표로 집중 지원

- 시스템 반도체, 바이오헬스, 미래차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대출·보증을 5조원 추가 확대 공급(당초 5→10조원으로 증액*)

* 신산업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기관 금융지원 규모를 3년간 15조원 증액 공급
(당초) '19~'21년간 15조원 → '19~'21년간 30조원 (산은, 기은, 수은, 신보, 기보)

- 시중은행을 통해 주력산업 및 혁신성장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설투자 자금을 지원하는 1조원 규모 특별온렌딩* 신설('19.7월 산은)

* [산은 온렌딩] 산은의 저리자금을 시중은행 등을 통해 중소기업 등에 공급

* (지원대상) 주력산업 및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시설투자자금
(지원내용) 업체별 최대 300억원, 최대 0.45%p까지 우대금리 지원

- 하반기중 「산업구조고도화 지원프로그램*」 3조원을 신속히 집행

* 3년간 10조원: ('19년) 4조원(6.7일 기준 1.1조원 집행) ('20년)3조원 ('21년)3조원

- 「환경·안전투자 프로그램」 1.7조원 집행('19~21년중 5조원 공급)

-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청정환경 설비 개발·생산·도입 기업에 대한 특별보증 0.6조원 추가 공급(신보 3,500억원, 기보 2,500억원)

⑤ 유턴기업 유치, 제도개편 등을 통해 투자분위기 확산

- 유턴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해 유턴기업 인정범위 확대* 및 국·공유재산 장기임대(50년) 등 입지지원 강화

▶ 대상업종 확대: (현행) 제조업 → (개선) 지식서비스업 추가

▶ 해외사업장 생산량 축소: (현행) 50% 이상 → (개선) 25% 이상 축소

▶ 생산제품 범위확대: (현행) 동일 세분류(4단위) 제품 국내생산시 유턴 인정
→ (개선) 소분류(3단위)로 완화

- 민간투자사업 추진시 연기금이 투자자로 참여하는 경우 사업자 선정시 우대(가점 부여 등)

- 정부 출자기관이 금년 배당금 감액분(1.5조원, '19.2월)을 활용하여 당초 계획보다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

* 금융·직접투자 등 사업 성격 감안하여 신규 활력과제 중심으로 투자하도록 점검하고 '20년 배당금 산정시 점검결과를 반영('20.2월)

③ 소비·관광 활성화 등 내수 활력 제고

① 자동차 관련 개별소비세 인하 추진

-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인하(세율 5→3.5%) 연장('19.6월 →'22.6월)
- 15년 이상 노후차 → 신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
(경유차로의 교체는 제외,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후 6개월, 100만원 한도)

※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 → 최대한 조속한 입법 추진

- ▶ (현행) 10년 이상 노후 경유차 → 신차(휘발유, 경유, LPG) 승용차로 교체시 개소세 70% 인하('19.12월)
- ▶ (개선) 10년 이상 노후 경유차 → 신차(휘발유, 경유, LPG) 승용차로 교체시 개소세 70% 인하('19.12월) +
15년 이상 노후차(휘발유, 경유, LPG) → 신차(휘발유, LPG) 승용차로 교체시에도 개소세 70% 인하(법 개정안)

* 예: 15년 이상 휘발유 승용차 → 신차 휘발유 승용차로 교체시 개소세율 5→1.05% 적용
(개소세 탄력세율 인하 적용기간과 중복 전제 탄력세율 30% 감면 + 노후차 교체 70% 감면)
(개소세 탄력세율 인하 적용기간 종료후에는 노후차 교체 70% 감면 5→1.5%)

- 수소전기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감면(최대 400만원) 일몰연장('19.6월 →'22.6월)

② 대규모 할인행사 및 해외소비의 국내소비 전환 유도 등 소비 진작

- 코리아 세일 페스타('19.11월)를 차질없이 개최하고, 이와 연계한 '1인 소상공인 미디어 플랫폼' 출범을 통해 소비진작 효과 극대화

* 연 3천명 이상의 소상공인이 제품을 온라인에 등록한 후 홍보·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

- 고효율 가전기기 구입시 구매금액의 10% 환급 지원
(가구당 20만원 한도, '19.8월~재원소진시)

* 대상: 한전 복지할인대상(3자녀이상, 대가족, 출산가구, 기초수급자, 장애인 등 335만 가구) 등
품목: TV, 냉장고, 공기청정기, 에어컨, 전기밥솥, 세탁기 등

※ 세부 지원사항은 「에너지효율 혁신전략('19.7월)」을 통해 발표

- 온-오프라인이 결합된 새로운 소비방식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협업하여 "O₂O Market(Online to Offline)" 시범 운영(2회) 후 확대 검토

* (판매자) 오프라인 판매를 통한 판매기회 확대 및 홍보 효과 제고
(소비자) 온라인 상품을 오프라인에서 직접 확인 → 합리적 구매 가능

- 해외소비의 국내소비 전환 유도를 위해 내국인에 대한 시내 및 출국장 면세점 구매 한도 상향조정 (3,000→5,000달러)

* 입국장면세점 구매한도(600달러) 포함시, 면세점 총 구매한도는 3,600 → 5,600달러로 상향

③ 국내여행 여건을 대폭 개선하여 국내관광 활성화

▪ 관광인프라 확충 등 관광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 지원

- ▶ **국제관광도시**(광역시 1곳) 및 **관광거점도시**(기초지자체 4곳) 선정 추진
- ▶ **관광지원서비스업**(관광연관산업 포괄) **신설**(19.7월) 및 **관광지원서비스업 지정 사업제도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 대상에 포함**(19.7월)

*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대상 (현행) 관광산업 → (개선) 관광지원서비스업도 포함

- ▶ **관광안내업을 신설하여 개별 여행객 대상 맞춤형 관광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1인 또는 소규모 창업을 촉진**(19.12월)

* (현행) 외국인 관광객 대상의 여행업은 등록자본금 1억원과 사무실 구비 필요
→ (개선) 신설된 관광안내업은 등록자본금 요건을 없애고, 사무실이 아닌 자택(사업장) 영업 가능

▪ 관광 콘텐츠를 적극 확충하여 국내여행 수요 창출

- ▶ 가을 여행주간과 연계하여 **외식업소 프로모션**(가격할인, 무료 시식회 등, 19.9월) 및 **‘우리동네 맛집 알리기’** 추진

* 경품증정 등 이벤트 통해 소비자 참여 독려, 선정된 맛집을 먹방TV와 연계 홍보

- ▶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**해양관광 거점**(군산, 완도, 서귀포, 고성) **조성 세부 계획을 확정**(19.10월)하고, 다양한 **해양레저·관광 행사 개최*** 추진

* 해양스포츠 제전 개최(19.8월), 해안누리길 걷기 축제 개최(19.10월) 및 테마노선 선정(19.10월)

- ▶ 한국 전통 문화를 활용한 관광콘텐츠 확충을 위해 **궁궐 전각 특별개방** 추진

* 경복궁 근정전 및 장고 시범개방(19.10월), 창덕궁 희정당 및 창경궁 명정전 내부 개방(19.9~10월), 양주 온릉 공개(19.10월~)

- ▶ 산악관광 저변 확대를 위한 **산림휴양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**(19.10월)

▪ 다양한 철도 할인 상품 개발 등을 통해 관광비용 경감

- ▶ **코레일 하나로 패스**(3일권 자유여행)를 각 지역의 **레저·맛집·숙박 등 제휴상품과 연계한 지역 특화 패스**(전라·충청·경상·강원 등)로 확대 개편*(19.下~20년)

* 전 연령 대상, 해당 지역을 운행하는 KTX·새마을·무궁화 등 모든 열차 이용 가능, 가족 단위 여행을 고려해 인원 추가마다 운임 할인폭 확대

- ▶ 하계·동계 방학시즌 **만 25세 이하 청년이 SRT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‘SRT 7일 프리패스’** 신설(19.下)

- ▶ 가족 단위 여행지원을 위해 **3세대 동행 시 SRT 운임을 30% 할인하는 ‘SRT 3세대 동행 할인’** 신설(19.下)

- ▶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**연안여객선 운임의 최대 50% 할인**이 가능한 **‘바다로’ 할인대상 확대**(만28세→만34세) 및 **상품가격 인하 운영**(19.6월~)

④ 한류 연계, 외국인관광객 편의 제고, 맞춤형 마케팅 등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적극 유치

- 10개 내외의 K-pop 행사를 집중해서 개최하고, 한식·뷰티 등과 연계한 'K-culture 페스티벌'을 브랜드화('19.9~10월, 매년 정례화 추진)

* K-pop공연 티켓소지자 비자 간소화, 항공편 증편 등 관광객 유치 지원

- 외국인 관광객 쇼핑 편의 제고를 위해 사후면세점 제도 개선

▶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 확대

* (1회 거래가액 한도)30→50만원, (총 거래가액 한도)100→200만원

▶ 즉시환급 시스템 구축지원 시범사업 추진

* 전체 사후면세점 2만여개 중 약 20% 수준의 점포만 즉시환급 가능('18년말 기준)

▶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온라인 기반의 사후면세점 위치정보 제공 및 사후면세 제도 홍보 강화

- 홍보강화 등을 통해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

▶ (세제)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적용 기한 연장('19년말→'20년말)

▶ (정보제공) 모바일 의료관광 통합정보서비스를 수요자 친화적 개편

* 법정 수수료율, 주요 서비스분야, 의료인 경력, 이용서비스 만족도 등 추가정보 제공

- 「한중일 관광미래세대 포럼」('19.8월) 개최, 「투어리즘 엑스포 저팬 2019」('19.10월) 참가를 통한 중국·일본 관광객 대상 맞춤형 마케팅 강화

- 한-아세안 특별정상회의('19.11월)를 계기로 아세안 관광객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아세안국가 단기비자 수수료 면제('19.10~12월)

- 크루즈 승객 입·출국 심사기간 단축 및 보안강화를 위해 관광상륙허가증 교부 방식을 QR코드 기반으로 전환('19.下)

④ 수출 분위기 반전을 위해 현장밀착형 수출충력 지원 강화

① 범부처 수출충력지원체계를 강화하고, 수출지원대책 추가 마련

- 수출기업 현장애로를 해소하는 「수출활력촉진단 2.0」 가동

* 9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비재, 新수출동력, 주력품목, 스타트업, 강소기업 등 5대 중점 분야별 대표지역을 방문하여 맞춤형 애로 해소('19.5~10월)

- 신남방·신북방 협력, 신규 FTA를 통한 시장확대 등 수출시장 다각화를 위해 「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」(‘19.7월) 마련·추진
- 디지털 무역, 서비스산업, 콘텐츠, 한류를 활용한 중소기업 수출지원 방안 등 분야별 수출 대책을 시리즈로 마련(‘19.3/4분기)

② 정책금융 7.5조원 추가 확대 등 수출금융 지원 강화

- 하반기중 정책금융을 7.5조원 추가 공급(427→434.5조원)하고, 최근 높은 수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新 수출동력* 등을 중점 지원

* 이차전지, 바이오·헬스, 화장품, 농수산물·식품, 전기차, OLED, 플라스틱 제품 등

- 2.5조원 규모 수출기업 전용 투자촉진 프로그램 가동
(수은, 3년간 2.5조원)

- ▶ (대상) 수출 중심 국내기업(대·중소기업 모두 포함)
- ▶ (용도) 시설자금 우선 지원(R&D, M&A 자금 포함)
- ▶ (인센티브) 대출기간 확대(예 : 10 → 15년)
대출금리 최대 1%p 우대 지원(시설자금에 한정)

- 「글로벌 플랜트·건설·스마트시티 펀드」 조성금액* 중 3,000억원을 하반기중 신속 투자하여 국내기업의 원활한 해외 수주 지원

* 총 1.5조원 (재정 1,500억 / 공공기관 4,500억 / 민간 9,000억원)

- 수출시장 확대 등을 위해 수출보험 한도 확대

- ▶ **신규 보험한도 증액**
(현행) 신남방북방 등 158개국 주력시장 33개국 대상 신규한도 최대 2배 확대中(‘19.1~6월)
→ (개선) 신규보험 한도 확대 시한을 ‘19.12월까지 연장
- ▶ **기존 보험한도 증액**
(현행) 부진 주력시장(中·比·베) 대상 기존보험 한도 10% 既증액(‘19.3월)
→ (개선) 10% 일괄 증액 대상을 미국·EU 등 주력시장까지 확대(‘19.7월)

- 對중국, 반도체, 석유화학·제품 등 수출 부진분야를 중심으로 수출금융 조기 집행* 추진, 필요시 수출금융 규모 확대

* 3/4분기 집행률(‘18년실적→‘19년목표, %) : (수은)66→71 (무보)75→80

③ 수출입 중소기업에 대한 부담 완화 지원

▪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용 원재료 관세환급 확대

* (현행)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107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환급 제한
→ (개선) 중소기업에는 관세환급 제한 배제

▪ 중소·중견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 선별검사시,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소요비용을 국가가 부담

▪ 중소기업의 보세공장 특허·운용상 부담 완화를 위한 ‘중소기업 보세공장제도’ 시범운영(‘19.下)

* 특허요건 완화, 관리절차 간소화 등 혜택 부여

▪ 비용경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 활성화

▶ **온라인수출 공동물류 사업 실시 및 물류서비스 혜택*** 제공(1,200개사, 7월~)

* 물류사 공동마케팅비, 입출항시 창고비용, 통관 컨설팅 등 지원

▶ **주문·배송 정보가 수출신고로 자동전환되고, 배송업체·국세청·우체국 등과 전산 연계를 통해 모든 업무가 원스톱으로 처리되는 온라인수출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**

▶ **업종별·테마별 전문몰을 선정하여 기술지원·마케팅 등 지원**(50개사, ‘19.6월~)

④ 수출상담회 확대 등으로 수출 판로 개척을 적극 지원

▪ 해외바이어와 국내업체를 매칭해주는 수출상담회를 수요자 맞춤형*으로 개편하고, 개최 확대(‘18년 124회→‘19년 191회<下 92회>)**

* (현행) 先 무역관 수요조사 및 해외 바이어 유치, 後 국내 참가업체 모집
(개편) 先 무역관 + 국내 업계 수요 조사, 後 기업수요 바탕으로 해외바이어 유치

** (KOTRA) ‘18년 69→‘19년 88회(下 28회) / (무역협회) ‘18년 55→‘19년 103회(下 64회)

▪ 한-중남미 비즈니스 서밋(‘19.10월)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계기로 국제금융기구 조달 설명회를 개최,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조달 기회 확대

▪ 해외 신선농산물 전용판매관(K-Fresh Zone) 확대* 및 통합마케팅(K-Food Fair, 인니·베트남·태국·일본·미국) 등을 통해 농식품 수출 지원

* (‘18년) 3개국, 18개 매장 → (‘19년) 5개국, 30개 매장

▪ 아세안 수산식품 시장 집중공략(현지 앵커숍, 수산식품박람회 등) 및 차세대 수출 유망품목(전복, 굴, 어묵) 육성

⑤ 신남방·신북방 정책 가속화 등을 통해 수출시장 다변화

▶ **한-아세안 특별정상회의(‘19.11월, 부산)를 계기로 신산업 협력강화 및 수출입·투자 확대 기반 마련**

▶ **한-우즈벡 FTA 공동연구를 연내 착수하고, 한-말레이시아 FTA, 한-필리핀 FTA, 한-인니 CEPA는 연내 타결 목표로 조속히 추진**

⑤ 지역 투자 촉진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

① 금융·보조금·세제 등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 투자 촉진

- 5조원 규모 '지역개발투자플랫폼'을 신설하여 도시재생, 노후산단 재생산업, 문화관광 인프라 등 지역개발사업에 집중 투자

- ▶ (투자대상) 도시재생, 노후산단 재생사업, 문화관광 인프라 등 지역개발사업 (도로, 항만, 철도는 제외)
- ▶ (참여기관) 산은, 연기금, 민간 금융기관 등(산은, LH, 캠코가 사업제안)
- ▶ (투자 방식) MOU를 통해 예비투자재원 5조원 마련, 사업별 투자여부 자율 결정
- ▶ (투자 인센티브) 정부출자기관 배당 인센티브 검토, 필요시 도시재생 PF보증(HUG) 등

- 지역 중소·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지방펀드를 1,000억원 규모로 하반기중 조성하고, 필요시 지방펀드 규모 확대

* 모태펀드 내 지방펀드를 現 약 2,500억원(운용중 펀드)에서 약 3,500억원 규모로 확대

-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요건 완화

- ▶ 지원업종 확대 : (현행) 열거방식(광역협력권 사업, 주력산업, 지역집중업종 등) (개선)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
- ▶ 신규고용 요건 완화 : 중소기업 (현행)50 → (개선)30명 이상
대기업 (현행)100 → (개선)70명 이상

- 10년이상 운영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외 지방* 이전시 양도세 분납 특례 기간 확대(2년거치 2년분납→5년거치 5년분납)

* 3년이상 운영한 후 동일 산단내(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산업단지 포함)로 이전시 포함

② 상생협약이 가시화된 지역을 중심으로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을 적극 창출하고, 기업투자가 조속히 일자리로 연결되도록 밀착지원

- ▶ 지역이 발굴한 모델에 대해서는 민관심사특 심의를 거쳐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선정(3/4분기)하고, 지원 패키지* 집행 착수

* (기업) 투자촉진보조금 확대, 중소기업 정책금융지원 우대, 임대전용산단 임대료 할인 등 (근로자) 공공어린이집 확충, 산단 정주·교통환경 개선·편의시설 확충 등

- ▶ 관계부처 협의 체계를 적극 가동하여 투자 애로 상시접수 및 신속해결 지원

* 투자애로 접수 → 유관기관 검토 → 관계부처 조정 → 검토사항 회신

③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(23개 사업, 24.1조원)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적정성 검토를 신속히 완료하고 기본계획 수립* 착수

* 철도·도로사업은 '19년 예산으로 기본계획 수립 우선 추진, R&D, 공항 건설 등은 '20년 예산 반영 후 기본계획 수립 착수

[2]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

① 지역별 차별화된 주택시장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

- ① 부동산시장 모니터링을 위한 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 (EWS, 국토연) 고도화* 추진(~'19.12월)

* 예: 시나리오 설정,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지역별 세분화, 분석권역 확대 등

- ② 주택 수급관리 강화를 위해 주택 재고수 대비 공급물량이 과도한 지역도 '미분양 관리지역'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(19.12월)

* 현재 미분양세대수 · 인허가실적 · 청약경쟁률 고려하여 지정중

- ③ 급격한 주택가격 변동 충격을 완충하기 위한 Sale & Lease Back 제도 요건을 완화*하고 홍보노력 강화, 필요시 지원물량 확대 검토

* (현행)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% 이하만 신청가능 → (개선) 120% 이하까지 확대

② 지속적인 가계부채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 강화

- ① 가계부채 증가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한편,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문에 대해서는 리스크 관리 노력 강화

- 업권별 여건을 감안하여 DSR 규제를 제2금융권에 확대 적용하고,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* 도입

* 경제규모 대비 급격한 가계신용 증가시, 은행권에 추가자본 적립의무 부과

- 건전한 여신관행 정착을 유도*하여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 ('18년 12.5%) 안정화 및 부동산임대업 대출 편중 완화

* 금융회사별 관리업종 선정, RTI(연간 임대소득/연간 이자비용) 기준 적용 등

- ② 부동산 시장 여건변화가 금융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「부동산 익스포져 종합관리시스템*」 구축 추진

* PF·채무보증펀드신탁 등 쏠금융부문의 부동산익스포져 데이터 수집관리 및 잠재리스크 분석

③ 시장 중심의 선제적 구조조정 추진 기반 마련

① 사전적·선제적 구조조정시스템 보완

- 주채무계열 대상 기업집단 선정시, 단순 은행여신 뿐만 아니라 회사채, CP 등 총차입 전반을 포괄하여 평가하도록 개선
- 범부처 산업진단시스템 운영을 통해 주요산업 업황·경쟁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, 필요시 선제적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

② 기업 구조조정 시장에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

- 하반기중 기업구조혁신펀드를 1조원 확대(1→2조원)하고, 자동차·조선·기계 등 구조혁신이 시급한 분야에 우선 배정*

* 총 조성규모의 20%(최대 1조원) 범위 내에서 산업별 섹터펀드 운영

- 시장성숙도 등을 고려한 유암코·캠코 역할 재정립 등을 통해 부실채권(NPL) 시장에 대한 민간수요 기반 확충

* (유암코) 점진적으로 NPL 투자액을 줄이고, 기업구조조정 투자 확대
(캠코) NPL 펀드 투자를 확대하여 민간 참여자의 수요저변 확대

- 캠코 시범투자 등을 통해 회생기업에 투자하는 기업경영 정상화 PEF에 대한 민간투자자 참여 유도

* 캠코가 회생법원 M&A절차가 진행 중인 PEF 등과 시범투자하여 성공사례 창출
→ 캠코는 신뢰도와 안정성 높은 LP의 수요자인 투자자로서 민간 후속투자 유인

③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책금융기관 대출·보증지원 강화

- 캠코를 통한 자산매입후재임대* 프로그램의 지원기간 확대, 초기 임대료 납부유예** 등 회생기업의 실질적 수혜범위 확대 추진

* 부동산 등 기업 자산을 매입한 후 기업에 재임대하여, 기업은 유동성을 높이고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

** 예: 임대기간 5년 → 최장 10년으로 확대 / 임대료 납부 최장 2년 유예 지원

- 캠코는 DIP 금융에 선도적으로 투자(3/4분기)하고, 시장수요 확대 등에 대비해 「회생전용 지원(DIP) 시스템」 마련

* Debtor In Possession 금융 : DIP는 회생절차기업의 기존경영인을 유지하는 제도로, DIP금융은 통상 회생절차 기업에 대해 운전자금 등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을 의미

④ 「기업구조조정제도 점검 TF(금융위 주관)」를 통해 기업회생 활성화를 위한 워크아웃과 회생절차상 개선방안 마련('19.下)

4 통상마찰 등 보호무역주의에 적극 대응

- ① 관계기관 합동 대응체계*를 통해 미·중 통상갈등 동향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, 국내 업종별 영향을 지속 점검
 - * 대외경제장관회의(부총리), 거시경제금융회의(기재부 1차관), 실물경제 대응반(산업부) 등
- ② 통상마찰로 인한 피해 업종 기업은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수출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필요한 금융서비스*도 제공
 - * 대출 만기 연장, 금리인상 유예, 보증 연장 등
- ③ 美측의 자동차 관세부과 가능성에 대비, 우리 자동차가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우리 입장 지속 전달
- ④ 기간산업의 필수 소재·부품·장비 국산화 개발, 수입선다변화, 국내 생산설비 확충 등 경쟁력 제고를 적극 지원
 - 100대 핵심 소재·부품·장비 기술개발에 매년 1조원 집중투자 (예타추진중)하여 국산화를 강도높게 추진하고 민간투자도 적극 지원
 - * 7월중 소재·부품·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발표
- ⑤ G20·APEC·OECD 등 국제사회와 공조를 강화하여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에 적극 대응

5 대외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외환금융시장 안정적 관리

- ① 미·중 통상마찰, 신흥국 금융불안 등 대외 리스크 확대에 국내 금융시장 불안이 나타나지 않도록 시장안정 노력 강화
 - 한은·금감원·국금센터 등 관계기관과 함께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 강화
 - 과도한 변동성 확대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거시경제금융회의 등을 중심으로 신속하고 적절한 시장안정화 조치 시행
 - 외환정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환시장 안정조치 내역 공개주기 단축(반기→분기)
 - * ('19.上 내역) 9월말 공개 → ('19.3/4 내역) 12월말 공개 → 이후부터 분기별 공개
- ② 대외채무 및 은행 외화유동성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여 대외 건전성을 안정적으로 유지
- ③ 국제신평사, 해외투자자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국가신용등급의 안정적 유지 등 대외신인도 관리 노력 강화

- ◇ 혁신성장 업그레이드 전략과 함께 산업혁신의 양날개인 서비스산업 및 제조업 혁신전략 추진, 당면 현실이 된 미래요인 대응 강화
- 「혁신성장 2.0 추진전략」을 마련하는 한편, 하반기중에는 신산업 성과 창출 및 규제·모험자본 등 혁신기반 확충 과제에 집중
 -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에 대한 큰 그림과 전략을 제시·추진
 - 인구변화 가속화에 대응, 출산율 제고 노력과 함께 인구변화 대응력 강화를 병행 추진하고, 우리경제 중장기 비전·전략 수립

(1) 혁신성장 가속화 : 성장동력 업그레이드

□ 혁신성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「혁신성장 2.0 추진전략」 마련

- 혁신성장의 확산을 보다 정교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「혁신성장 2.0 추진전략」 마련(19.7월)
 - 산업생태계 혁신을 위해 「3+1 전략투자 및 8대 선도사업」을 확대하고, 사회문제 해결에 신기술을 접목하여 신산업 창출
 - 기업의 창의적·도전적 혁신활동 지원을 위해 개방형 혁신 체계*를 강화하고 융합형 사업모델** 창출 지원
 - * 클라우드 소싱 플랫폼, 개방형 혁신 네트워크, 온라인 제조 플랫폼 육성 등
 - ** 다양한 제품, 서비스를 연계·결합한 수요자 맞춤형 종합서비스 모델
 - 미래사회 수요를 바탕으로 기술적 난제·미래 도전적 R&D 추진
 -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인재를 육성하고 사회전반의 혁신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직업·평생교육 강화

(2) 혁신성과 창출 및 확산

① 하반기중 신산업 성과 창출 및 혁신기반 확충 과제 우선 추진

① 플랫폼경제 구현을 위한 '3+1 전략투자' 분야별 로드맵 이행 본격화

- ▶ (데이터) 연내 빅데이터 플랫폼 10개 및 빅데이터센터 100개 구축·운영
중소기업 등에 데이터 바우처(구매·가공 바우처) 지원('19년 1,640개사)
- ▶ (AI) AI 학습용 데이터 개방(7월), 알고리즘('19년 20개사), 컴퓨팅 파워('19년 200개사) 패키지 지원
- ▶ (수소경제) 연내 수소차 4,926대(추경포함시 6,395대) 및 수소충전소 86기 보급,
연내 수소 시범도시 선정 범부처 수소기술 개발 로드맵 수립('19.9월)
- ▶ (혁신인재) AI 대학원(3개소) 개원('19.9월) 및 이노베이션 아카데미(4분기)

② 기존 8대 선도사업을 12대 선도사업으로 확대·개편하고, 추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지원 강화

- 스마트공장·산단 등 4대 신산업은 선제적 투자 및 규제개선을 지속 추진하고, 민간 대규모 투자를 적극 유도

- ▶ (스마트공장·산단) 중소·벤처기업 제조혁신을 위해 초연결·데이터·맞춤형(AI기반) 생산을 구현하는 스마트 미래공장 고도화 로드맵 마련('19.3/4), 스마트산단 실행계획 및 스마트공급 산업 육성방안 수립('19.下)
- ▶ (미래차)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 고도화, 범부처 대형 R&D 프로젝트* 추진
* (전기·수소차) 성능·내구성 R&D 확대 / (자율차) 운행 시스템 개발·검증 R&D 예타 추진
- ▶ (핀테크)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재추진('19.3/4분기), 규제 발굴 및 혁신방안 마련
- ▶ (바이오헬스) 개발-인허가-생산-시장출시 등 쉼주기 지원 강화
* 공공보유 데이터 개방, 인허가 심사기간 단축, 제약·바이오 인력양성 마스터플랜 수립 등

- 에너지 등 4개 신산업에 대해서는 인프라 조기 구축, 초기 시장 조성 등을 통해 성과 창출기반 구축

- ▶ (에너지) 스마트그리드 체험단지 착수, 스마트미터 보급(9월)
- ▶ (스마트시티)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선정(9월), 국가 시범도시 착공(부산, 11월)
- ▶ (스마트팜) 혁신밸리 2차지역(밀양, 고령) 기본계획 수립(8월), 1차지역(김제·상주) 기반조성 착공(11월)
- ▶ (드론) 드론 실증도시사업 착수(7월), 드론 전용시험비행장 3개소 시범운영 개시(8월)

- 지능형 로봇 등 전·후방 연관효과가 큰 산업을 중심으로 4개 선도사업을 추가 발굴하여 집중 지원

③ 기업들이 새로운 비즈니스에 도전할 수 있도록 규제 혁신 사례 추가 창출 및 확산 지원

- 규제 샌드박스 사례 100건*을 조기 창출하고, 규제 샌드박스 승인 기업에 대해 과제심사 간소화·자금공급·컨설팅 등 사업화 종합지원

* 7.2일 현재 규제 샌드박스 68개 기승인

▶ **(과제심사)** 규제부처에 부가조건 입증 책임 부여, 동일·유사 사례에 대한 필요시 부처협의 기간 단축, 서면심의 등 **심의절차 간소화(Fast-Track)**

▶ **(자금 공급)**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에 대해 **제품 제작, 사업화, 실증특례, 책임보험 가입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**

· **(투자)**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에 대한 **모태펀드 투자확대 방안 마련**(19.下)

* 모태펀드 운용사 선정시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에 투자하는 VC 우대 등

· **(대출)** **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**에 규제샌드박스 승인 기업 명시

· **(재정지원)** **사업화 및 실증특례 자금 지원**(기업당 최대 1.2억원, 총 64억원)

· **(책임보험)**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에 **책임보험료 지원**(최대 1,500만원 총 6억원)

▶ **(컨설팅)** **중진공·KOTRA 등을 통해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의 사업화·판로개척·해외진출 등을 집중 지원**

▶ **(사후관리)** **실증특례 수시 점검**(19.10월~)을 통해 규제정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관련 규제 근본적 개선

- 하반기중 규제자유특구가 지정(수도권 제외)될 수 있도록 예산 등을 적극 지원하여 산업·경제 혁신의 거점으로 육성

▶ **규제 샌드박스 필요성이 크고, 규제완화에 따른 산업적 기대효과가 명확하게 제시된 특구부터 우선 지정**

* **1차 지정**(19.7월) → 1차 지정 제외 지자체에 대해서는 컨설팅 등을 통해 완성도 제고를 위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**연내 추가 지정 추진**

- **규제정부입증책임제의 쏠부처 확대 실시를 통해 하반기중 1,300여개 행정규칙을 추가 정비하여 연내 총 1,800여개 행정규칙 일제 정비**

* '19년 상반기중 행정규칙 500여개 기 정비

- **행정규제기본법 상 '先허용·後규제 원칙' 시행**(19.7월)을 계기로 **신산업·기존산업 등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본격화**

④ 모험자본을 적극 확충하여 혁신기업의 출현과 성장을 뒷받침

-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은행·보험사 등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제한 등 투자제약 해소

* 예: 은행의 핀테크 기업 지분 15% 초과보유 허용 명확화

-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투자유도를 위해 벤처기업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간을 3년 연장(‘19년말→ ’22년말)

- 국내 VC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통한 모험자본 공급여건 확충

▶ 창투자·조합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

* (현행) 국내창업 투자 의무 준수 후 납입자본금(출자금)의 40% 이내 해외투자 가능
→ (개선) 해외투자 한도 완화

▶ 해외 VC 등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(19.11월) 정례화 추진

- 정책금융기관이 혁신분야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 금융기관 평가 및 감독 체계 개선

▶ (평가) 공공기관 평가시 **혁신 성장분야** 자금지원에 대한 **배점 및 가점확대**

▶ (검사) **혁신분야** 자금공급에 대한 **면책규정 신설**

⑤ R&D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핵심기술 확보 지원

- 신성장동력·원천기술 R&D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* 및 이월공제기간 연장(최대 5→10년)

* (현행) 자율주행차, 인공지능, 지능형반도체, 5G 등 173개 기술

→ (개선) 바이오배터기술, 시스템반도체 설계·제조기술 추가

⑥ 공공구매를 통해 혁신제품에 대한 초창기 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「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」 마련(19.7월)

▶ **(혁신지향 구매)** 혁신성 기준 부합 제품은 수의계약 대상으로 허용하여 초기 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**패스트트랙** 도입

▶ **(혁신조달 플랫폼)** 혁신제품 통합몰 구축(20년) 및 수요·공급 매칭 컨설팅, 부처간 공공수요 발굴 등을 위한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신설

▶ **(도전적 수요 발굴)** 도전적 공공수요 적극 발굴 **R&D-조달연계** 추진 등

▶ **(인센티브 등)** 혁신제품 구매에 대해 **포상·기관평가 반영 및 면책 강화**

② 벤처·창업 생태계 조성 위한 제2벤처붐 확산 가속화

① 창업-성장-회수 등 단계별 지원 강화

- 기술인재 창업·벤처기업 스케일업 등 제2 벤처붐 확산을 위해 하반기중 3.2조원 규모 이상의 펀드를 조성하고 투자 개시

* 스케일업펀드(2.5조원), M&A 등 회수펀드(3,500억원), 엔젤세컨더리(300억원), 엔젤펀드(330억원), 기술지주회사펀드(500억원), 해외VC 글로벌펀드(3,000억원) 등

- 유망 농식품 분야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공간 제공, 정책 자금, 제도개선 등 집중 지원

- ▶ (창업공간) 양곡창고 등 유허시설 리모델링후 청년·귀촌인 등에게 창업공간 제공(20개소)
- ▶ (정책자금) 벤처·유망 창업기업 지원 위한 **1,000억원 규모 전용 정책자금** 지원('19.7월)
- ▶ (제도개선) 단순 가공 농산물(과일즙 등)을 수매해 2차 가공하는 벤처·창업기업도 6차산업 인증 대상으로 포함

- 예비 유니콘 기업 및 엔젤투자 유치기업을 대상으로 하반기중 1,100억원 규모의 기보 특례보증 공급('19.7월~)

- ▶ (예비 유니콘) 총 1,000억원, 보증비율(85→95%) 및 보증료(1% 고정) 등 우대('19.下)
- ▶ (엔젤투자) 총 100억원, 투자 유치액의 2배(기업당 최대 3억원)까지 100% 보증

- 5~10년내 유니콘 성장이 가능한 혁신 ICT기업을 발굴, 집중 육성하는 'Future Unicorn 50' 프로그램 도입('19.下)

* 매년 50개 내외 스타트업 공모 선발 → 자금·멘토링·R&D·기술이전 연계지원

-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벤처지주회사에 세제혜택*을 부여하고, 스톡옵션 비과세 확대**를 통해 우수인재의 벤처기업 유입 유도

* 출자로 취득한 초기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·배당소득에 법인세 비과세

** 스톡옵션 행사 이익 소득세 비과세 한도 : (현행) 2천만원 → (개선) 3천만원

② 벤처·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

- 벤처기업을 기술성·성장성 위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벤처특별법 개정안('18.11월 국회 제출)의 조속한 입법 지원

* (현행)보증대출 실적 위주 판단 → (개선)민간주도 '벤처확인'자가 기술성장성 위주 판단

- 新외감법 시행('18.11월)에 따른 중소기업 회계부담 완화를 위해 「중소기업을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」 마련

* (현행) 기업특성 고려없이 모든 기업에 동일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적용
→ (개선) 중소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모범규준 마련

* '19.7월 거래소·상장사협회·코스닥협회 공동 연구용역 → '20년초 모범규준 마련

(3) 제조업 비전 및 전략 신속 추진

① 「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」(19.6월)을 속도감 있게 추진

① 스마트화·친환경화·융복합화로 산업구조 혁신 가속화

- ▶ 스마트공장, 스마트산단, AI·5G 기반 업종 특화 산업지능화를 통해 중소기업 대상 스마트공장 구축 및 스마트산단 조성
- ▶ 친환경차·친환경선박·공기산업·에너지산업 등 친환경 시장 선점을 위해 기술개발·인프라 구축·수요창출 병행 지원
- ▶ 핵심기술 개발 및 공공실증을 통해 자율운행 자동차·선박 등 융합 신상품 사업화 촉진, 규제샌드박스 등을 활용해 융합 제품·서비스 규제 해소

② 신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육성, 기존 주력산업은 혁신을 통해 탈바꿈

- ▶ 중장기 기술 로드맵 제시, 민관 합동 대형 R&D 추진 등을 통해 신산업을 발굴·육성하고, 시스템반도체, 미래차, 바이오 등 선제적 산업인프라 투자
- ▶ 산업군별 차별화된 전략*으로 고부가가치 유망품목으로 전환, 디자인·엔지니어링 역량 강화**를 통해 부가가치 제고
- * 예: (초격차) 반도체, 디스플레이 (재도약) 자동차, 조선 (탈바꿈) 섬유, 의류
- ** 예: (제조업체+디자인) 제조업체에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매칭
(디자인업체+제조) 디자인업체에 생산·제조 전문기업 연계
- ▶ 산업단지를 혁신 테스트베드로 조성, 초고위험국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'특별계정' 운영 검토

③ 도전·축적의 산업생태계 조성 및 투자혁신을 위한 정부 역할 강화

- ▶ 산업 수요에 기반한 공학교육 혁신방안 마련, 고난도 과제 도전 R&D 확대, 제조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'초대형 민간 펀드' 조성 방안 강구
- ▶ 첨단시설, 신산업, 위기·낙후지역 등의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, 설비투자, 신성장동력 R&D 세제지원 대상기술 확대, 정부가 선도적으로 수요창출실증확대

② 하반기에는 기발표 산업대책 신속 추진·시행 + 업종별 대책 추가 마련

① 5G⁺ 전략(19.4월), 시스템 반도체 비전 및 전략(19.4월),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(19.5월) 등 기발표 산업별 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시행

※ 세계최초 5G 상용화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5G⁺ 전략 본격화

- ▶ 5G망 투자 촉진*, 만·관 협력 강화를 통해 연내 85개市 동단위(전체 인구의 93%)까지 5G 서비스 커버리지 확대 추진
 - * 망투자 세액공제(2~3%), 주파수 공급 확대를 위한 '5G⁺ 스펙트럼 플랜' 수립(19.12월) 등
- ▶ 5G⁺ 핵심서비스의 조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
 - * (실감콘텐츠) 추경을 통해 '5G 콘텐츠 플래그십 프로젝트' 확대 지원 및 대규모 입체 실감 콘텐츠 스튜디오 구축 추진
 - * (스마트공장) 5G기술 산업현장 실증(19.7~12월), B2B 서비스용 5G통신 단말기 시제품 개발(19.12월)
 - * (디지털 헬스케어) 5G 기반 응급의료시스템 개발(과기정통부·복지부·소방청) 본격 추진
- ▶ 5G 시험·인증 서비스, 5G 장비·드론 R&D 등 산업 생태계 조성
 - * (시험·인증) 5G 단말의 수출 지원을 위한 국제공인인증 서비스 제공(19.7월~) 등
 - * (5G 장비) 5G 핵심장비의 중소기업·통신사 등 공동 R&D 개발 지원 등

② 제조업 비전 및 전략(19.6월)에 기반한 미래 산업구조 전망을 바탕으로 업종별 혁신 대책을 시리즈로 마련

- ▶ (미래차) 스마트카·친환경차의 민간·공공 수요 창출, 산업 생태계 조성, 기술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대책 마련
- ▶ (디스플레이)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을 통해 차세대·융복합 R&D 지원, 중소기업 대상 장비·시설 인프라 지원

- 유망 신식품 분야 육성을 위한 '식품산업 활력대책'도 마련(19.9월)

③ 주력산업 분야 중소·중견기업, 지방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2.5조원 규모 특별운영자금* 지원 프로그램 신설(19.6, 산은)

- * (지원대상) 주력산업 및 신산업 분야 중소·중견기업의 운영자금
(금리우대) 기본 우대(△0.8%p) + 추가 우대(△0.2%p) 등 최대 △1.0%p 인하

[4] 서비스산업 혁신 가속화

① 서비스산업 혁신전략(19.6월)의 「4+1 추진전략」 본격 추진

① 재정·세제·금융 등의 서비스업-제조업 차별해소

- ▶ (재정) 창업기업 부담금(16개) 면제혜택을 제조업→지식서비스업까지 확대 추진
- ▶ (세제) 창업 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대폭 확대
- ▶ (금융) 정책금융 지원, 스케일업 전용 펀드 활용 민간투자 지원
- ▶ (기타) 주요 창업지원 사업(초기 창업패키지, 청년희망드림보증) 지원범위 확대

② 서비스 R&D, 표준화 등 기초 인프라 구축

- ▶ (R&D) 정부 서비스 R&D 투자 확대, R&D 세액공제 확대
- ▶ (표준화 등) 서비스 표준화 전략 준비 및 분야별 맞춤형 인력양성

③ ICT 솔루션 접목 등 서비스업-제조업간 융합 촉진

- ▶ (사업서비스) 제조전문서비스 육성방안 준비, 연구개발 서비스기업 지원 등
- ▶ (ICT 접목) 서비스산업과 ICT융합 위한 '스마트 서비스' 사업 신설 등 생산성 향상 지원

④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화

- 연내 서비스발전법 국회 통과를 적극 추진하고, 입법이전에도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가능한 조치 실시

⑤ 업종별·서비스산업별 현장체감형 성과 도출

- ▶ (4대업종) 관광·보건·물류·콘텐츠 등 유망서비스 핵심규제 개선
- ▶ (O2O·공유경제) 新서비스 진입장벽 완화, 온라인 맞춤형 규제 재정비 등

② 하반기중 물류·콘텐츠 등 서비스산업 혁신방안 병행 추진

① 생활물류 서비스산업 육성 및 물류산업 투자 촉진

- ▶ 택배·배송대행업 등 생활물류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 추진('19.7월)
- ▶ 유희부지 등을 활용한 도심내·인근 대규모 물류시설 입지 2~3개소 발굴('19.12월)
- ▶ 제3국 중계 수출을 위한 글로벌 배송센터 투자유치 인센티브 마련('19.12월)
- ▶ 스마트 해상·육상 물류의 효율적 연계를 위한 범부처 T/F 발족('19.7월) 및 스마트 육해상 물류연계 효율화 전략 수립('19.12월)

② 영화·만화·캐릭터·애니메이션 등 콘텐츠 분야별 발전방안 마련

(5) 인구정책 등 미래대비 어젠다 사회적 의제화

①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한 우리사회의 적응력(Adaptability) 강화

- 「인구정책TF」 논의결과중 단기 추진 가능한 과제는 우선 발표(19.3/4), 중장기 과제는 사회적 수용성 제고 및 추진동력 확보 노력 병행

- ▶ (고용) 기업이 정년 후 고용연장을 확대하도록 인센티브 부여
* 기업이 자발적으로 정년후 근로자를 재고용하도록 사업주 지원 제도 설계
- ▶ (외국인 정책) 해외우수인재 유치확대를 위한 지원제도 신설
- ▶ (재정) 인구변화 가속화를 반영, 장기재정전망 주기 단축(5→3년)
재정전망시계 축소(40년이상→20~30년)
- ▶ (복지) 장기요양보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안정화 방안 마련
- ▶ (교육) 학령인구 감소를 감안, 학교시설 복합화 및 대학의 평생·직업교육 기능 확대
- ▶ (산업) 베이비붐 세대 고령화에 대비, 고령친화산업 적극 육성
- ▶ (국토) 인구변화에 맞추어 주택수급 재추계·고령자주택·소형주택 공급확대
- ▶ (국방)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,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병력구조를 간부중심으로 정예화
- ▶ (금융)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주택연금 및 퇴직·개인연금 활성화
- ▶ (지역) 인구과소지역 확대에 대응, 공공·생활시설을 중심지에 집약,
지자체간 행정서비스(보건소·도서관·체육관 등) 공동제공

② 중장기 분야별 심층전략 수립

- ① 중장기 분야별 심층전략을 마련하여 삶의 질, 생산성 등 우리 경제·사회 핵심 이슈에 대한 비전과 정책방향 제시(19.12월)
 - 국민소득 수준에 부합하는 삶의 질 구현을 위한 「소득 3만불 시대 삶의 질 제고 전략」 수립
 -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혁신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「경제 역동성 강화를 위한 생산성 혁신 전략」 수립
- ② 중장기전략 수립과정에 전문가 참여 확대 및 국민 공감대 형성
 - 중장기 심층전략 논의의 저변 확대를 위해 중장기전략위원회 산하에 「미래전략포럼」 신설·운영(19.下 5회 내외 개최)
 - 국책·민간 연구기관, 대학 연구소, 학회 등과 「미래연구 네트워크」를 구성하고, 미래전략 컨퍼런스(가칭) 개최(19.9월)
 - 중장기전략에 대한 청년층 등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「2019 미래한국 아이디어 공모전」 개최(19.8~10월)

- ◇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일자리 지원·사회안전망 강화 등은 더 속도내고, 청년 희망사다리 등은 추가하며, 시장기대와 달랐던 부분은 보완
-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, 주거 등 서민 핵심생계비 부담 경감 및 자영업자 지원 강화
 - 청년의 계층이동사다리를 보강하고, 가계 재산형성 및 금융 취약계층 지원 강화
 - 포용성 강화의 기반으로서의 사회적경제 및 공정경제 활성화
 - 최저임금은 시장 수용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되도록 지원하고, 실태조사를 토대로 주 52시간제 확대 시행에 대한 대비방안 마련

(1) 속도별 과제

①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 지원 강화

❶ 노인·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확대

- 노인일자리 80만개 제공 목표 조기 달성('22→'21년)*을 추진하고, 하반기 중 공익활동 사업기간 연장(9→11개월) 및 3만개 추가 지원

* ('19년) 61만개 → ('20년) 71만개 → ('21년) 80만개

- 근로빈곤층의 탈수급·자립 지원을 위해 자활사업 일자리 확대

* ('19년) 4.8만명 → (추경안) +1만명

- 하반기중 고용·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內 실직자,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일자리 지원 확대(약 1만명, '19년 추경안 791억원)

- 연말까지 사회서비스일자리 9.5만개를 차질없이 확충하고, '20년의 경우 5만개 이상 확대('19년 15 → '20년 20만개)

② 기존 일자리 사업(170개)에 대한 성과평가, 직접일자리 사업 일몰제 도입* 등 통해 유사·중복·저성과 사업 정비 및 사업 효과성 제고

* 성과평가 부진한 사업은 기한(1~3년 내외) 설정 기한도래시 성과 감인하여 재설계폐지 추진

③ 청년 일자리 등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강화

▪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청년일자리 사업 확대

*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:('19년) 2.3만명 → (추경안) +4천명(+234억원)

▪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확대를 통해 청년층 신규채용 지원

* ('19년) 9.8만명 → (추경안) +3.2만명(+2,883억원)

▪ 고용형태 다양화 등 변화에 대응하여 현행 재직자·실업자 대상 내일배움카드를 「(가칭)평생내일배움카드」로 확대개편('20년 시행)

- ▶ (현행) 재직자: 3년 200만원 자부담 0~20% / 실업자: 1년 200만원 자부담 평균 25%
- ▶ (개선) 고용형태 무관(자영업자특고 등 포함), 5년 300~500만원 자부담 30~40%

▪ 중소기업 근로여건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주택 구입·전세자금을 저리 대출하는 경우 세제혜택 제공

- ▶ (현행)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주택구입·전세자금 저리대출시 업무와 무관한 금액 (업무무관 가지급금)으로 보아 이자상당액 등에 대해 과세
- ▶ (개선) 근로자에게 저리대출한 주택구입·전세자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서 제외하여 이자상당액 등에 대해 비과세

② 저소득층·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

①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대상 확대 및 취약계층 소득지원 강화

▪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에 중증장애인 포함시,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('20년, 생계급여)

- ▶ (현행) 수급자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중증장애인 포함 또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 포함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
- ▶ (개선) 수급가구에 중증장애인 포함시에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

-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기본재산 공제액* 및 주거용재산 상한액 확대**(‘20년)

* 현행 수급자 기본재산 공제액: (대도시)54백만원 (중소도시)34백만원 (농어촌)29백만원

** 현행 주거용재산 상한액: (대도시)100백만원 (중소도시)68백만원 (농어촌)38백만원

-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에 적용되는 재산 평가기준 완화(‘19.下)

* 부양의무자 일반·금융·자동차 재산의 소득환산율 50% 인하(4.17→2.08%)

- 실제 부양여부와 관계없이 가족에게 지원받는 것으로 간주하여 급여에서 차감하는 부양비 산정기준*을 하향 조정(‘20년)

* 현행 기준 : [부양의무자 소득액 - 부양의무자의 중위소득] × 15% 또는 30%

-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근로 유인 제고를 위해 근로연령층(25~64세)에 대해서도 근로소득공제 적용 신설(‘20년)

* 現 24세이하 40만원+30%, 65~74세 30%, 75세이상 20만원+30% 공제중

- 저소득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대상 확대(‘20년)

* (현행) 월정액급여 210만원 및 총급여 2,500만원 이하 생산직 근로자

-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 비과세 적용(‘19.下)

* (현행) 육아휴직급여 등 출산·육아관련 급여에 대해 근로소득세 비과세

(개선)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 대하여도 근로소득세 비과세 적용

-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제로 전환하여 개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 강화

▶ (‘19.7월) **일상생활지원**(활동지원, 보조기기 등)에 대해 우선적으로 종합조사 실시

▶ (‘20년 이후) **이동지원**(특별교통수단, ‘20년), **소득·고용지원**(장애인연금, ‘22년)에 대해 종합조사 확대 실시

② 취약계층의 적정소득 보장을 위한 고용안전망 확충

▪ 실업급여 지급액 인상 및 지급기간 연장 등 보장성 강화('19.下)

* 지급액: (임금노동자) 평균임금의 50→60% (자영업자) 기준보수의 50→60%
지급기간: (임금노동자) 90~240일→120~270일 (자영업자) 90~180일→120~210일

▪ EITC 지원 대상 및 가구당 최대지원액 확대 지급('19.9월, 12월)

* 지원대상: ('17년) 166 → ('19년 예상) 334만가구(+168만가구)
최대지원액(단독가구/홀벌이/맞벌이): 85/200/250→150/260/300만원

▪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빈곤층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('한국형 실업부조') 신설('20년)

▶ (I 유형) 저소득층, 경력단절여성 및 취업경험 없는 청년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(50만원x6개월) 지급

* (저소득층)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, (청년)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

▶ (II 유형) I 유형과 지원대상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*에서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와 동일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

* (저소득층) 기준중위소득 50~60%, (청년) 기준중위소득 120% 초과
(중장년) 기준중위소득 100%이하

③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노동자 보호방안 마련

▪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축소, 고위험 직종 산재보험료 일부 일정기간(예: 1년) 지원 등 법령 개정 추진

※ 산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일부 플랫폼 노동자(예: 비전속 대리운전 기사)의 **기본적 재해보장**을 위해 **우체국 상해보험 개발 및 가입비(우체국 공익재단) 지원**

▪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공정거래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특고 범위 확대('19.下)

* (한행 택배기사·배달의민서기사 등 6개 업종 → (개선) 전속대리운전기사·대출모집인·신용카드모집인 등 추가

* 공정위 「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」 개정('19.下)

▪ 규모, 근로시간, 연령 등 기초 실태조사를 통해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정책기반 마련

* '19년 시험조사 후 공식통계(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) 전환 여부 검토

③ 주거·교통·교육·의료·통신 등 5대 생계비 지속 경감

① (주거) 서민주거 안정 및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

- 양질의 주택공급 기반 마련을 위하여 수도권 30만호 입지 확정¹에 따른 지구지정 등 후속절차를 차질없이 이행

* (1, 2차 발표지구) 연내 지구지정, (3차 발표지구) '20년 중 지구지정
- 소규모 택지(지구지정 불필요)는 설계 등을 거쳐 연내 주택사업승인 등 절차 진행

-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(HUG)를 전국으로 확대(19.7월)

*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1/2 경과 前 가입해야 하나, 미분양관리지역에서는 종료 6개월전까지 가입을 허용하는 특례보증 시행중(18.10월)

- 신혼부부 매입·전세임대주택 제도의 경우 주거안정이 시급한 저소득층·다자녀 가구가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²(19.7월)

* 가점항목개편: (현행) 월평균소득, 혼인기간, 연령, 경제활동 기간
(개선) 주거안정 시급성과 관계가 적은 혼인기간 연령 경제활동 기간 삭제

-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취약계층의 경우 목돈마련이 어려운 점을 감안, 입주보증금을 축소하고 임대료로 전환(19.6월)

▶ **(최저소득층·생계·주거급여 수급자)** 매입임대 보증금 미부과 및 임대료³ 일부 상향

* 임대료는 주거급여 수급액 범위내 감당가능한 수준에서 결정

▶ **(그 외 저소득층·의료급여 수급자 등)** 매입전세임대 보증금 축소 및 임대료 일부 상향

* 보증금(예시): (매입임대) 470→180만원, (전세임대) 450→225만원

- 청년·비주택 거주자 대상 매입임대주택(LH)의 거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시설품목⁴ 신규 지원(19.6월)

* 냉장고, 에어컨, 세탁기, 책걸상, 불박이장, 전자레인지 등

② (교통)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 경감

- 유류세 인하 기간 연장(19.5.6→19.8.31) 및 단계적 환원(유류세 인하폭 : ~5.6일 15% → 5.7일 7% → 9.1일 0%)

- 전국 11개 주요도시⁵를 대상으로 월 교통비 최대 30% 절감 효과가 있는 광역알뜰교통카드⁶ 시범사업 추진(19.6~12월)

* 5개 광역(부산 인천 대전 울산 세종) 및 6개 기초(수원 청주 전주 포항 영주 양산)

**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도보·자전거로 이동하는 거리에 비례하여 마일리지 지급

- 같은 출발일·구간 KTX 예매표의 시간 변경을 허용(1회)하여 기차표 변경에 따른 예매 수수료 부담 경감('19.下)
- 시외버스 정기권, 정액권(요금의 20~30% 할인) 시범 도입('19.下)
-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통해 교통 공공성 확대, '22년까지 재정 도로의 1.1배 수준까지 인하 추진

*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('18.8월) : 구리-포천(3,800→3,600원, '19.1월 既시행), 천안-논산('19.下), 대구-부산·서울-춘천(하반기중 통행료 인하방안 마련)

- 도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신규 지원

	여객 운임	차량운임	생활연료 운송비
현행	정규운임 20% 정률지원 (상한액, 5,000~7,000원)	2,500cc 미만 20%	지원없음
개선	상동	1,000cc 미만 50% 1,600cc 미만 30% 2,500cc 미만 20%	유류, 가스, 연탄, 목재펠릿의 해상운송비 지원 (국비 50%, 지자체 50%)

③ (교육) 학자금 대출·대학 근로 장학사업 개선 등 교육비 부담 절감

-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고교 무상교육*을 우선 실시('19.9월)하고, '21년까지 전 학년으로 단계적 확대**

* 입학금, 수업료, 학교운영지원비, 교과서대금

** ('19년 2학기) 3학년 → ('20년) 2, 3학년 → ('21년~) 초·중·고

- 복권기금을 활용한 저소득층 중고생 대상 장학사업 지원 실시('19.下)

* 중·고생 1,500명, 중학생 월 30만원, 고등학생 월 40만원 지원

- 만12세~17세 청소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방과후 활동 이용권(월 44시간) 제공('19.9월)
- 저소득층 만 12~23세 장애인을 대상으로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(매월 8만원 이내) ('19.下)
- 졸업 후 농업분야 취창업을 조건으로 하는 '청년창업농육성 장학금' 지급('19.2학기~)

* 농대 3학년 이상 학생에게 등록금 전액과 장려금(학기당 200만원) 지원

-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연체부담 완화 방향으로 지연배상금 부과체계 개편(‘19.7월)

* (1단계, ~’19년 2학기) (현행) 3개월 이내 7%, 3개월 초과 9% → (개편) 6%로 단일화
(2단계, ’20년 1학기~) (현행) 단일금리(6%) → (개편) 대출금리+연체가산금리(2.5%p)

④ (의료) 의료비 부담 경감 및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

- 난임시술비(최대 10→17회) 및 고위험임신부(대상질환 11→19종) 진료비 지원 확대
- 병원 2·3인실(‘19.7월), 복부·흉부 MRI, 생식기 초음파 급여화(‘19.下) 및 거동불편환자 의료접근성 향상 위한 방문진료 시범사업(‘19.8월)
- 정신질환자 치료·보호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중증 정신질환자 보호 및 재활지원 강화*
- 진료정보교류사업* 활성화를 위해 참여 의료기관** 확산 및 수가 지원 방안 마련(‘19.下)

* 환자 동의하에 진료기록을 참여 의료기관간에 전자적으로 공유

** (‘19년) 거점의료기관 32개, 3,818개의료기관 → (‘20) 50개, 5,500개 참여지원

- 非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관련 규제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질병 사전예방 및 건강관리 활성화
 - 건강관리서비스의 의료행위 여부 신속확인 제도 도입·운영
- * 유권해석 요청 → 민관합동법령해석위 30일 내 개최 → 개최후 7일내 통보 절차화

⑤ (통신) 알뜰폰 비용 경감 등 통신료 부담 완화

- 알뜰폰 전파사용료 감면연장(‘19년말→’22년말) 및 망 도매 제공 의무기한 일몰 연장(‘19.9월→’22.9월)
- 전국 시내버스에 공공와이파이 설치 확대를 통한 이동 중 통신 요금 절감 추진(‘19.下 23,047대 추가)

4 소상공인·자영업자 지원 강화

① 소상공인·자영업자의 성장·혁신거점 구축

- 소상공인·자영업자가 밀집한 구도심 상권을 쇼핑·커뮤니티·문화·예술 등이 집적된 상권으로 복합개발(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)
 - * 상권당 5년간 80억원 지원 → '19년 13곳(하반기 6곳), '22년까지 30곳 육성
- 소공인집적지구내 제품개발, 공동작업장, 온라인 공동구매·판매, 전시장까지 일괄 지원하는 '소공인 복합지원센터' 설치
 - * 하반기 2곳, '22년까지 총 10개 내외로 확대

② 준비된 창업유도를 위해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확대 개편

- '19년 추경 반영을 통해, 하반기 3개소 신규 설치·교육 추진
 - * '18년 6개소 → '22년 17개소
-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를 복합형 교육시설*로 확대 개편하여 창업 前 단계 교육 강화 및 거점 확산
 - * 전용 교육장, 체험점포, 실습, 회의공간 등이 결합된 시설

③ 소상공인·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 및 자금지원

- 소상공인·자영업자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등을 위해 모바일 직불결제(제로페이) 활성화 추진

▶ 정부·지자체 관서운영경비의 제로페이 사용 확산을 유도하고, 프랜차이즈 등을 통한 일괄등록 가맹 확대

* 가맹점 등록현황: ('19.1말) 46,628 (3말) 128,067 (5말) 238,111 (6.27) 251,559

▶ 제로페이 사용분에 40%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, 전통시장 추가공제한도 (100만원)에 제로페이 사용분 포함

▶ 제로페이 상품권 발행정산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바일 온누리지역사랑상품권 발행('19.8월)

- 지역사랑상품권의 금년도 발행규모를 확대하여 소상공인 지원과 함께 지역 소비를 진작('19년 2→2.3조원)
- 소상공인·자영업자의 금융어려움 해소를 위한 지원 강화

▶ 소상공인·자영업자 초저금리 대출* 지원규모 0.5조원 확대(기은, 총1.8→2.3조원 공급)

* 별도 가산금리 없이 대출시점의 기준금리(KORIBOR 1년물)만 부과

▶ 장래 발생가능한 카드매출수입을 바탕으로 자금을 지원(한도·금리 1%p 우대)하는 카드매출정보 기반대출 0.2조원 공급

5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반 강화

① 사회적경제를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원

- '19년 청년 등 창업 860팀(사회적기업·협동조합)을 육성하고,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5,840명(당초 5,000명 + 추경안 840명) 지원
-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, 지역 자원을 활용해 지역 일자리를 만들고 수익을 지역에 재투자하는 지역 순환형 경제 모델 도입
- * (예 :터 새로이 사업) 지역 건축사·시공자 등이 공익성 있는 기업을 설립해 청년·주민을 고용, 노후 건축물을 리모델링(제도 연구 용역중(~'19. 8월), 사업자 100곳 지정(~'22년))

②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경제 모델 발굴

- 노동자 협동조합을 통한 기업 인수·전환, 프리랜서 협동조합 등 고용 안정을 위한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 발굴
- * 연구용역('19.3~8월), 해외사례 등을 검토하여 모델 발굴 및 지원방안 마련('19.下)
- 부처간 협업(과기정통부, 행안부)을 통해 연구자·일반시민·사회적경제조직·지역대학 등이 함께하는 사회문제 해결형 R&D* 추진('19.下)
- * 기획(연구자·주민·사회적경제조직) + 연구·개발(R&D) + 기술적용 후속 사업 (비 R&D 예산)으로 구성, 지역대학 리빙랩 등과도 연계

③ 사회적경제기업 스케일업을 위한 성장 단계별 지원

-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*(소셜캠퍼스 온), 사회적경제 혁신타운** 등 스케일업 지원을 위한 지역 거점·클러스터 확충('19.下)
- * 4개소(원주·광주·울산·서울) 추가 조성 → 총 10개소 조성·운영 예정
- ** 2개 시범 지역(전북 군산, 경남 창원) 사업 실시 설계 등 추진
- 성장성 높은 소셜 벤처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R&D, 컨설팅, 판로 등 지원 확대
- * 디딤돌 창업 과제 R&D(여성 참여·소셜 벤처: '19년 100억 원), 중소기업 R&D 기획 지원·멘토링('19. 下, 소셜 벤처 20개사), 소상공인 홈쇼핑 입점 지원('19. 下, 사회적경제기업 30개사) 등

- 사회적협동조합이 제공하는 교육·보건·복지·문화·환경·농업·에너지·주택·금융·노동·여성·청소년·노년·장애인·청소년·문화·환경·농업·에너지·주택·금융·노동·여성·청소년·노년·장애인 면제*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 분야 협동조합의 성장지원 강화

* (현행)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교육·보건(간병·산후조리·보육) 용역에 대해 부가세 면제중
(개선) 협동조합기본법상 사회적협동조합 제공하는 교육·보건용역에도 부가세 면제

④ 사회적경제 정책 인프라 구축 강화

- 사회적경제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('19.7월) 및 주요 지원사업 안내서 발간('19.下)
- 사회적금융 지원을 위해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표준 평가 체계 및 신용 정보 DB 구축('19.9월)

6. **정당한 경쟁이 보장되는 공정경제 기반 확충**

❶ 甲과 乙이 상생하는 포용적 甲乙관계 구축

- 공공기관이 공정문화 정착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'공공기관-협력업체-하도급업체'간 거래 등 모범사례 발굴·확산 추진
- 甲乙관계 개선과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 정착을 위해 「상생협력 확산 및 거래관행 개선대책」 마련('19.11월)
- 대-중소기업간 상생과 공존을 위해 '자상한 기업(자발적 상생 기업)'을 발굴하여 대기업이 지원하는 중소기업에 정부가 매칭 지원

* 대기업을 조성하는 벤처펀드에 모태펀드가 공동 우선 출자, 상생형 스마트공장 및 공동 R&D 자금 지원 등

- 불공정거래 관행 우려가 큰 유통·대리점 분야에 대해 표준계약서 추가도입('19.12월)

* (유통) 백화점·대형마트·TV홈쇼핑·편의점·온라인쇼핑몰 → 대형쇼핑몰·이웃넷·면세점 추가
(대리점) 의료, 식음료 → 자동차부품 등 3~4개 업종 추가 검토

- **취약 가맹점주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창업-운영-폐업 등 생애주기 단계별 경영안정 조치 시행**

* 허위·과장 창업정보의 세부 유형 구체화, 가맹금 수취 방식 전환(차액가맹금→로열티) 유도, 급격한 상권 변화 등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 해지시 위약금 부과 금지 등

- 중소기업 기술 탈취 방지를 위해 수·위탁거래 관계에서 기술자료 요구시 비밀유지협약(NDA) 체결 의무화

* 수·위탁거래 外 일반적인 기술거래에 대해서도 비밀유지협약(NDA) 체결이 확산될 수 있도록 「중소기업 기술보호법」 개정 병행

② 성장 과실이 고루 확산될 수 있도록 시장경쟁 기반 강화

- 산업 분야 기술혁신을 가로막는 독과점 남용행위 감시 강화

- ▶ 제약분야 등을 중심으로 부당한 특허권 행사 등으로 시장진입을 제한하고 R&D 혁신을 저해하는 행위 집중 점검
- ▶ 운영체제(OS), 앱 마켓(App Market) 등 모바일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에는 대해서는 엄정 제재
- ▶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콘텐츠 제공 사업자들을 차별하거나 배타조건부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감시

- 혁신경쟁 보호를 위해 M&A 신고 대상에 스타트업 거액 인수도 포함시켜 사각지대 해소(공정거래법 개정, '19.下)

* (현행) 피취득회사 매출·자산총액 300억원 이상시 신고의무 부과(매출·자산총액 기준)
→ (개선) 매출·자산총액 300억원 이하인 경우도 포함(거래금액 기준 추가)

- 일감몰아주기 관행 개선을 위해 업종별* 내부거래 실태조사 및 사익편취행위 심사기준 명확화(예규 제정, '19.12월)

* SI·물류 등 내부거래비중이 높은 업종

(2) 추가 과제

①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 마련(19.7월)

① 어려운 처지에 놓인 청년들의 희망 복원 토대 마련

- 도심·교통요지 등 주거선호 지역에 저렴한 주거지 공급

- ▶ 교통접근성이 좋은 공공청사를 추가로 복합개발(청사+근생시설+임대주택)하여 청년 임대주택·신혼희망주택으로 공급
- ▶ 노후주택 리모델링 지원단가(현행 호당 0.95억원) 현실화를 통해 역세권 고시원을 청년 세어하우스로 리모델링하고 시세보다 낮은 수준으로 공급

- 청년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기회 확대

▶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(희망사다리장학금 I) 지원규모 확대('20년), 후학습 장학금(희망사다리장학금 II) 요건 완화*('19.2학기)

* (현행) 중소·중견기업에 3년이상 재직중인 고졸근로자가 대학진학시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

▶ 민간자율형 일학습병행제 및 P-Tech(민간주도 직업교육 과정, 교육부) 활성화 등을 통해 산업계와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

- 자산형성·대출부담 경감 등을 통해 취약청년들의 자립지원 강화

▶ 취약청년 근로자 저축시,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 출시('20년)

▶ 저소득·저신용 청년의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청년·대학생 햇살론II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'20년 출시

▶ 오프라인 청년센터(現 전국 16개)에서 장기구직자, 저소득층 등 구직애로 청년을 대상으로 1년 단위의 밀착 멘토링 제공

② 청년들의 창의성·도전정신을 고취하는 일자리 창출 확대

-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新직업을 창출하고 확산·정착시키는 쏠주기적 프로그램인 '新직업 Making Lab' 신설
- 청년전용 창업 융자 확대('20년, +300억원), 청년창업펀드 추가 조성('20년, +1,000억원) 등을 통해 창업 청년들의 재정부담 완화

② 금융접근성 강화, 가계 자산형성 지원 등 금융포용성 강화

① 취약계층 금융접근성 강화, 소비자 중심 금융시스템 구축, 서민 자산형성 지원 등 금융포용성 강화 종합대책 마련('19.下)

- 지속가능한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민간·정부의 역할분담을 통한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도 강구

② 하반기중 국민들의 재산형성 지원은 우선 추진

- 비과세 종합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일몰('19년말) 연장 추진
 - * 지원대상·지원수준 등은 현재 진행중인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조정
- 일반 국민들의 부동산간접투자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「공모형 부동산간접투자(펀드·리츠) 활성화 방안」 마련('19.7월)

▶ (우량자산 취득기회 확대) 공공 건물·토지 공급 확대, 입지규제 완화 및 리츠·펀드간 상호투자 제한 규제 완화 등 검토

▶ (투자 인센티브) 공모형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유지*
부동산에 대한 예상 투자수익률 지수 개발 등

* (현행) 공모형·사모형 모두 분리과세 → (개선) 사모형은 합산과세, 공모형은 분리과세 유지

(3) 보완할 과제

① 시장 기대와 달랐던 부분은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지속 보완

- ❶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합리적 수준으로 결정되도록 지원
 - 일자리 안정자금, EITC,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등의 차질없는 집행을 통해 '18~'19년 최저임금 인상(29.1%) 부담 최소화
 - '20년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함께 경제·고용 영향, 부담능력, 시장 수용성 등이 종합 고려되어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적극 지원
 -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지속 추진

② 주 52시간제 안정적 착근과 함께 제도적 보완도 추진

* ('19.7월~) 300인 이상 특례제외 업종, ('20.1월~) 50~299인 기업

- 50~299인 기업의 경우 실태조사('19.6월)와 기업 준비상황 등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토대로 대비방안 마련

-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(19.7월 시행)은 업종·직무별 특성을 감안하여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재량근로제 대상 확대 등 제도 개선 병행

▶ ① 계도기간 부여, ② 재량근로제 대상 확대 등 업종·직무별 특성을 감안하여 현장 안착 지원

* ① 계도기간 부여 : (탄력근로제 도입 추진 기업) 개정법 시행 시까지
(유연근로제 도입 추진 기업 및 노선 버스업) 9월까지

② 재량근로제 대상 확대 : 애널리스트, 펀드매니저 등 포함

- 단위기간 확대 등 탄력근로제 제도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도 조속히 추진

②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지속가능한 고용모델 구축

- 경제·사회 전반에 ‘동일노동·동일임금’ 확산을 위해 내부 공감대가 형성된 공공기관부터 임금체계 개편 우선 추진
- 직무의 가치를 반영하고 연공성은 완화하되, ① 공공기관별 특성 반영, ② 노사협의·자율로 ③ 단계적 도입 추진
- 노사협의를 거쳐 직무중심의 보수체계를 도입·발전시킨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상의 인센티브 확대

VI. 경제 전망

◇ 우리 경제를 둘러싼 **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**이나, **최대한의 정책노력**을 통해 **성장·고용 하방리스크 보완**

❶ (성장) '19년은 전년보다 **소폭 둔화**된 **2.4~2.5% 성장** 전망

- 대외여건 악화로 투자·수출이 어려운 가운데, 추경, 투자·수출활성화 등 **활력제고 노력**이 **경기 하방리스크 보완** 예상

❷ (고용) '19년은 일자리 정책 효과 등으로 **취업자 증가폭**이 전년보다 **확대**되면서 **20만명 증가** 예상

- 고용률(15~64세)은 전년보다 다소 개선된 **66.8%** 예상

❸ (물가) '19년은 유가 하락,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 등 **공급측 요인의 안정세**가 크게 작용하며 **연간 0.9% 상승** 전망

❹ (경상수지) '19년은 서비스수지가 다소 개선되겠으나, **수출부진** 등의 영향으로 '18년 대비 감소한 **605억불 흑자** 전망

2019~2020년 경제전망

	2018년	2019년	2020년
■ 경제성장률(%)	<u>2.7</u>	<u>2.4~2.5</u>	<u>2.6</u>
■ 취업자증감(만명)	<u>9.7</u>	<u>20</u>	<u>20</u>
고용률(% , 15~64세)	<u>66.6</u>	<u>66.8</u>	<u>67.0</u>
■ 소비자물가(%)	<u>1.5</u>	<u>0.9</u>	<u>1.5</u>
■ 경상수지(억불)	<u>764</u>	<u>605</u>	<u>635</u>

2019~2020년 경제전망

(전년동기비, %)

	'18년 실적	'19년 ^e		'20년 ^e 연간
		1/4	연간	
전망 전제				
세계경제(PPP) ¹⁾	3.6	-	3.3	3.6
Dubai 유가(\$/bbl)	70	63	65	63
실질 GDP	2.7	1.7	2.4~2.5	2.6
민간소비	2.8	1.9	2.4	2.5
설비투자	△2.4	△17.4	△4.0	2.8
건설투자	△4.3	△7.2	△2.8	△1.5
지식재산생산물투자	2.2	2.9	2.8	2.8
경상 GDP	3.1	1.2	3.0	3.8
취업자 증감(만명)	9.7	17.7	20	20
고용률(15~64세, %)	66.6	66.0	66.8	67.0
소비자물가	1.5	0.5	0.9	1.5
경상수지(억달러)	764	112	605	635
상품수지(억달러)	1,119	196	940	995
수출(통관,%)	5.4	△8.5	△5.0	2.1
수입(통관,%)	11.9	△6.8	△4.1	2.0
서비스·본원·이전 소득수지(억달러)	△355	△84	△335	△360

1) IMF World Economic Outlook('19.4월)

1. 10조원+ α 수준 투자 프로젝트 추진

- ❶ 행정절차 간소화, 이해관계 조정 등을 통해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 조기착공 지원(약 8조원)
- ❷ 공공기관 투자 1.0조원 이상 추가확대(53→54조원)
- ❸ 0.6조원 항만 민간투자사업 연내 추가 착공(민간투자사업 12.6 → 13.2조원)
- ❹ SOC 낙찰차액 재투자 및 민간 先투자 사업 추진(+ α)

2. 규제 샌드박스 사례 창출 및 확산 지원

- ❶ 규제샌드박스 사례 100건을 조기창출, 규제 샌드박스 승인 기업의 원활한 사업화를 위해 과제심사·자금·컨설팅 등 종합지원
- ❷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지역의 산업·경제 혁신 촉진

3. 제조업 업종별 전략 수립 및 4대 선도 신산업 추가발굴

- ❶ 「제조업 비전 및 전략」의 미래 산업구조 전망을 바탕으로 미래차, 소재·부품·장비 등 업종별 혁신 대책을 시리즈로 마련
- ❷ 신산업 분야의 8대 선도사업 추진을 가속화하고, 지능형 로봇 등 4대 선도사업을 추가 발굴하여 집중 지원

4. 서비스업-제조업 차별 시정 및 서비스 핵심규제 개선

- ❶ 재정·세제·금융 등 다양한 지원 제도에서의 서비스업-제조업 차별을 해소하고, 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
- ❷ 실감콘텐츠 활성화 전략('19.8월), 콘텐츠 분야별(영화·만화·캐릭터·애니메이션 등) 발전방안('19.下) 등 업종별 대책 지속 마련

5. 수출금융 지원 강화 및 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 수립

- ❶ 수출금융 조기집행 추진 및 필요시 수출금융 규모 확대, 하반기중 수출상담회를 92회 개최하여 국내업체와 해외바이어 매칭 지원
- ❷ 범부처 '수출활력촉진단'을 가동(5~10월)하여 현장애로를 해소하고,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「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」 마련

6.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 및 주 52시간제 확대 대비

- ① '20년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함께 경제·고용 영향, 부담능력, 시장 수용성 등이 종합 고려되어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적극 지원
- ② 주 52시간제 확대(50~299인 기업)에 대비, 실태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대비방안 마련, 300인 이상 특례제외 업종의 경우 계도기간 부여 등 현장안착 지원

7.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확대 및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

- ①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및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강화, 현장 점검 강화 등을 통해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지속 제고
- ② 「청년희망사다리 강화방안」을 신속 추진하고, 청년층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과제를 적극 보완

8. 혁신형 사회적경제 모델 발굴

- ①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사회적경제 역할 확대, 사회적경제 조직이 참여하는 사회문제 해결형 R&D 등 지역문제 해결과 연계한 모델 발굴
- ② 연구용역을 토대로 노동자 협동조합을 통한 기업인수·전환, 프리랜서 협동조합 등 고용 안정을 위한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 발굴 추진

9. 인구정책 TF 과제 추진 및 중장기 분야별 심층전략 수립

- ① 인구정책 TF에서 도출된 단기과제를 집중 추진·점검하고,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추가 과제 발굴 추진
- ② 삶의 질 제고, 생산성 혁신 등 핵심 미래 이슈에 대해 심층 연구와 전문가·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중장기 전략을 마련

10. 대내외 리스크의 안정적 관리

- ① 지역별 차별화된 주택시장에 대한 탄력대응, 가계부채 안정화 노력 지속, 현안 기업 구조조정 등 대내 잠재 리스크에 선제 대응
- ② 미중 통상마찰, 신흥국 금융불안 등 대외 불안요인의 국내 영향 최소화를 위해 컨틴전시 플랜 등을 통해 적극 대응

1. '19.7월

정책 과제	부처·기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'19년도 세법개정안 발표 	기재부
[투자 분위기 확산]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속상각제도 6개월 한시 확대 (19.7~12월, 대기업: 대상 확대 / 중소·중견: 가속상각 허용한도 50→75%) 	기재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해외 인프라 수주 전략 발표 	기재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서울 7호선 청라연장 기본계획 승인 	국토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양재 R&D 캠퍼스 조성 관련 양곡도매시장의 이전부지 선정 	기재부, 서울시
[소비 등 내수 활성화]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중소기업 혁신제품 판로지원 방안 발표 	중기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수산물 신유통체계 구축 방안 발표 	해수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관광지원서비스업 신설 * 관광지원서비스업 지정 사업제도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대상에 포함 	문체부
[수출 활력 제고]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 발표 	산업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수출기업 전용 투자촉진 프로그램(2.5조원) 가동 	기재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수출보험 한도 확대 	산업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중소기업 보세공장제도 시범 운영 	관세청
[리스크 관리 강화]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소재·부품·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발표 	산업부

정책 과제	부처·기관
[제2벤처붐 확산 가속화]	
▪ 예비 유니콘기업 등 대상 1,100억원 규모 기보 특례보증 공급	중기부
▪ 농촌 창업공간 공급(양곡창고 등 유희시설)	농림부
[혁신성장 가속화 및 혁신성과 창출·확산]	
▪ 혁신성장 2.0 추진전략 발표	기재부
▪ 에너지 효율혁신 전략 발표	산업부
▪ 건설산업 규제개선 방안 발표	국토부
▪ 규제자유특구 지원 방안 발표	중기부
▪ 규제자유특구 1차 지정	중기부
▪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 발표	기재부
▪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Ⅵ 발표	기재부
▪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발표	국토부
▪ 행정규제기본법 상 先허용·後규제 원칙 시행	국조실
▪ 규제샌드박스 절차 간소화 (유사사례가 있는 경우, 심사기간 3→2개월)	국조실, 산업부, 과기정통부, 중기부, 금융위
[제조업·서비스산업 혁신]	
▪ 화물운송사업 차량 톤급 제한 규제완화	국토부
▪ 생활물류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 추진	국토부
[사회안전망 강화]	
▪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가능기간 폐지	고용부
▪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휴가급여 지급(최대 150만원)	고용부
▪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전환	복지부
▪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실시	복지부

정책 과제	부처·기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소액채당금 상한액 인상(400→1,000만원) 	고용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초생보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	복지부
[청년 희망사다리 보장]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청년희망사다리 강화 방안 발표 	기재부
[금융 포용성 강화]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모형 부동산 간접투자(펀드·리츠) 활성화방안 발표 	국토부
[최저임금·주52시간 보완]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'20년 최저임금 결정 	고용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주52시간 근로제 시행 	고용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재량근로제 대상 확대(애널리스트, 펀드매니저 등) 	고용부
[생계비 경감]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세금 보증금 반환보증 특례(HUG) 전국 확대 	국토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학자금대출 지연배상금률 인하(9~7→6%) 	교육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복권기금 활용한 저소득층 중고생 대상 장학사업(1,500명, 월 30~40만원) 실시 	기재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저소득층·다자녀 가구가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 우선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	국토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·3인실 건강보험 급여화 	복지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난임시술비·고위험임신부 진료비 지원 확대 	복지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임신, 출산지원비 지원 대상 확대 	복지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장기요양보험료 경감대상 확대 	복지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KTX 예매표 시간 변경 허용 	국토부
[사회적 경제 활성화]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 	기재부

2. '19.8월

정책 과제	부처·기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'20년도 예산안 발표(9.3일 국회 제출) 	기재부
[투자 분위기 확산]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광명-서울 고속도로(1.8조원) 착공 	기재부, 국토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신안산선(안산-여의도, 3.4조원) 실시계획 승인 	기재부, 국토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새만금 매립 선도사업 시행자 선정 	새만금청
[소비 등 내수 활성화]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금액의 10% 환급 시행 	산업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QR코드 방식의 크루즈 출입국 심사 도입 	법무부
[수출 활력 제고]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디지털 무역 촉진방안 발표(분야별 수출 대책의 일환) 	산업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중소기업에 대한 관세환급 확대(환급제한품목 적용 배제) 	기재부, 관세청
[리스크 관리 강화]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부동산 익스포저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방안 마련 	금융위
[혁신성장 가속화 및 혁신성과 창출·확산]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미래차 산업 육성 전략 발표 	산업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스마트축산 발전 방안 발표 	농림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드론 전용시험비행장 3개소 시범운영 개시 	국토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 2~3개소 선정 	교육부, 국토부, 중기부

정책 과제	부처 · 기관
[제조업·서비스산업 혁신]	
▪ 차세대 디스플레이 발전방안 (제조업 업종별 혁신대책의 일환) 발표	산업부
▪ 지식재산(IP) 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 발표	특허청
▪ 영화산업 중장기 계획 (콘텐츠 분야별 발전방안 시리즈의 일환) 발표	문체부
▪ 만화산업 진흥계획 (콘텐츠 분야별 발전방안 시리즈의 일환) 발표	문체부
▪ 실감콘텐츠 활성화 전략 발표	과기정통부, 문체부 등
[사회안전망 강화]	
▪ 플랫폼 노동자 실태조사 실시	통계청
[금융포용성 강화]	
▪ 초저금리 대출(소상공인·자영업자 대상) 0.5조원 확대 공급	중기부, 금융위
▪ 카드매출정보 기반 대출 0.2조원 공급	금융위
[생계비 경감]	
▪ 시외버스 정기권·정액권 시범 도입	국토부
▪ 거동불편자 대상 방문진료 시범사업 실시	복지부
▪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(학기당 450만원) 지급	농림부
[중장기 전략 수립]	
▪ 2019 미래한국 아이디어 공모전 (~10월)	기재부

3. '19.9월

정책 과제		부처 · 기관
[투자 분위기 확산]		
▪ 2020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 선정		국조실, 균형위
▪ 평택-익산 고속도로(3.7조원) 착공		기재부, 국토부
▪ 양평-이천 고속도로 공사 착공		기재부, 국토부
▪ 인천공항 제2터미널 확장공사 착공		국토부
▪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지 선정		국토부
[소비 등 내수 활성화]		
▪ 내국인 시내·출국장 면세점 구매 한도 상향(3→5천불)		기재부
▪ K-culture 페스티벌 개최 (~10월)		문체부
▪ 가을여행 주간 연계 외식업소 프로모션		농림부, 문체부
▪ O2O Market 시범 운영 (서울)		중기부
▪ 창덕궁 회정당 및 창경궁 명정전 내부 개방 (~10월) (궁궐 전각 특별 개방 일환)		문화재청
[수출 활력 제고]		
▪ 서비스산업 수출지원 방안 발표 (분야별 수출대책의 일환)		산업부
▪ 스타트업 해외진출 지원 대책 발표 (분야별 수출대책의 일환)		중기부
▪ 한류를 활용한 중소기업 수출지원 방안 마련 (분야별 수출대책의 일환)		중기부
[지역경제 활성화]		
▪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		기재부, 산업부, 고용부
[리스크 관리 강화]		
▪ '19.상반기 외환시장 안정조치 내역 공개		기재부

정책 과제	부처·기관
[혁신성장 가속화 및 혁신성과 창출·확산]	
▪ 스마트 미래공장 고도화 로드맵 발표	중기부, 산업부 과기정통부
▪ 지식재산(IP) 기반의 스타트업 지원 대책 발표	특허청
▪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 발표	과기정통부, 산업부 국토부
▪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재추진	금융위
▪ AI 대학원 개원 (고려대, 성균관대, KAIST)	과기정통부
[제조업·서비스산업 혁신]	
▪ 항공산업 발전전략 (제조업 업종별 혁신대책의 일환) 발표	산업부
▪ 식품산업 활력대책 발표	농림부
▪ 음악산업 진흥계획 (콘텐츠 분야별 발전방안 시리즈의 일환) 발표	문체부
[사회안전망 강화]	
▪ EITC 지원대상 및 최대지원액 확대 지급	기재부
[생계비 경감]	
▪ 고등학교 3학년 대상 무상교육 실시	교육부
▪ 전립선 초음파 건보 급여화	복지부
[인구구조변화 대응]	
▪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정책대응 발표	기재부
[사회적 경제 활성화]	
▪ 사회적경제기업 표준 평가체계 및 신용DB 구축	금융위
[중장기 전략 수립]	
▪ 미래전략 컨퍼런스(가칭) 개최	기재부
▪ 정년 후 근로자 재고용 지원 제도 설계	기재부, 고용부

4. '19.10월

정책 과제		부처 · 기관
[투자 분위기 확산]		
▪ 민투사업에 연기금 참여시 사업자 선정 우대		기재부
▪ 인천내항 상상플랫폼(민투사업) 착공		해수부
▪ 부산북항 재개발 지하차도(민투사업) 착공		해수부
▪ 포항 영일만 신항 인입철도 개통		해수부
[소비 등 내수 활성화]		
▪ 산림휴양관광 활성화 방안 발표		문체부, 중기부, 환경부, 산림청
▪ 섬 관광 활성화 계획 발표		해수부
▪ SRT 3세대 동행 할인(30%) 신설		국토부
▪ 아세안국가 단기비자 수수료 면제(10~12월)		법무부
▪ 경복궁 근정전 및 양주 온릉 개방·공개 (궁궐 전각 특별 개방 일환)		문화재청
▪ 해양관광 거점(군산, 완도, 서귀포, 고성) 조성 세부계획 확정		해수부
[혁신성장 가속화 및 혁신성과 창출·확산]		
▪ 화장품 산업 종합지원 계획 수립		복지부
[제조업·서비스산업 혁신]		
▪ 애니메이션산업 진흥계획(콘텐츠 분야별 발전방안 시리즈의 일환) 발표		문체부
[사회안전망 강화]		
▪ 건설 일자리 전달체계 개선 방안 발표		국토부

정책 과제	부처 · 기관
▪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지원 방안 발표	고용부
▪ 공정거래법상 보호대상 특고 범위 확대	공정위
[생계비 경감]	
▪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대상 확대(임신부 추가)	복지부
▪ 복부·흉부 MRI 건보 급여화	복지부
[최저임금·주52시간 보완]	
▪ 50~299인 기업 주52시간제 적용 대비방안 발표	고용부
[국민 안전]	
▪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발표	국조실

5. '19.11월

정책 과제	부처 · 기관
[투자 분위기 확산]	
▪ 대산 산단내 HPC 공장* (2.7조원) 착공 * 중질유 원료 석유화학단지(15만평)	기재부, 환경부
▪ 포항 영일만 공장증설(1.5조원) 착공	기재부, 포항시
▪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(부산) 착공	국토부
▪ 스마트팜 혁신밸리(김제·상주) 기반조성 착공	농림부
▪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시 3개소 사업계획 확정 (의정부 교정시설, 원주 군부지, 부산 원예시험장)	기재부
[소비 등 내수 활성화]	
▪ SRT 7일 프리패스 발행	국토부
▪ 코리아 세일 페스타 개최	산업부
▪ 1인 소상공인 미디어 플랫폼 출범	중기부
▪ 시내면세점 최종사업자 선정	기재부, 관세청
▪ O2O Market 시범 운영(동대문)	중기부

정책 과제	부처·기관
[리스크 관리 강화]	
▪ 기업 워크아웃 및 회생절차 개선방안 발표	기재부, 금융위
[혁신성장 가속화 및 혁신성과 창출·확산]	
▪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대상 모태펀드 투자확대 방안 발표	중기부
▪ 스마트시티형 규제샌드박스 도입	국토부
▪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설립 (서울 개포동)	과기정통부
▪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개최	중기부
[제조업·서비스산업 혁신]	
▪ 첨단재생의료 기본계획 발표	복지부
▪ 캐릭터산업 진흥계획 (콘텐츠 분야별 발전방안 시리즈의 일환) 발표	문체부
▪ 지역 콘텐츠산업 중장기 계획 발표	문체부
[생계비 경감]	
▪ 대구-부산·서울-춘천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방안 발표	기재부, 국토부
[공정경제 기반 강화]	
▪ 상생협력 확산 및 거래관행 개선 대책 발표	중기부, 공정위

6. '19.12월

정책 과제		부처·기관
[투자 분위기 확산]		
▪ 고현항 항만재개발 3단계(민투자사업) 착공		해수부
▪ 화성 복합 테마파크(4.6조원) 부지 개발계획 변경		국토부
▪ 글로벌 비즈니스센터(3.7조원) 착공		기재부, 서울시
▪ 김포도시철도 개통		국토부
▪ GTX B노선(6조원)에 대한 예타조사 완료		기재부
▪ 지역개발투자플랫폼 신설		기재부, 금융위
[소비 등 내수 활성화]		
▪ DMZ 생태평화벨트 실시실행계획 발표		문체부
▪ 코레일 하나로패스 확대 개편(숙박·맛집 등과 연계)		국토부
▪ 국제관광도시 및 관광거점도시 선정		문체부
▪ 관광안내업 신설		문체부
[수출 활력 제고]		
▪ 전자상거래 수출 전용 통관시스템 개통		관세청
[지역경제 활성화]		
▪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대상확대 및 요건 완화		기재부, 산업부
[리스크 관리 강화]		
▪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제도 개선		국토부
▪ '19.3분기 외환시장 안정조치 내역 공개		기재부
▪ 캠코를 통한 회생기업대상 자산매입후재임대 프로그램 제도개선		금융위

정책 과제	부처·기관
[혁신성장 가속화 및 혁신성과 창출·확산]	
▪ 혁신성장동력 강화전략 발표	과기정통부
▪ 규제입증책임제 통해 하반기 중 1,300여개 행정규칙 정비	국조실 등
▪ 수소시범도시 3곳 내외 선정	국토부
[제조업·서비스산업 혁신]	
▪ 5G ⁺ 스펙트럼 플랜 발표	과기정통부
▪ 스마트 육해상 물류연계 효율화 전략 발표	해수부
▪ 첨단의료 복합단지 제4차 기본계획 발표	복지부
▪ 제약·의료기기 등 첨단제품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	과기정통부, 산업부 복지부, 식약처
▪ 제약·바이오 인력양성 마스터플랜 발표	복지부
▪ 운송업 양수 대상 확대(운송사업자→지입차주 포함)	국토부
▪ 운송가맹사업 진입기준 완화(차량대수 500→50대)	국토부
▪ 도심내 인근 대규모 물류시설 입지 2~3개소 발굴	국토부
▪ 글로벌 배송센터 투자유치 인센티브 마련	국토부
[사회안전망 강화]	
▪ EITC 지원대상 및 최대지원액 확대 지급	기재부
▪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 비과세 적용	기재부
[생계비 경감]	
▪ 천안-논산 민자고속도로 요금 인하	기재부, 국토부

정책 과제	부처·기관
▪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설치 확대(+2.3만대)	과기정통부
▪ 자궁·난소 초음파 진보 급여화	복지부
▪ 진료정보교류사업 활성화 방안 발표	복지부
[사회적 경제 활성화]	
▪ 사회적경제 중장기 기본계획 발표	기재부
▪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발표	기재부
[공정경제 기반 강화]	
▪ SI·물류업종 내부거래 실태조사	공정위
▪ 유통·대리점 분야에 대해 표준계약서 추가도입	공정위
▪ 사익편취행위 심사기준 명확화	공정위
[국민 안전]	
▪ 국토안전 관리원 설립	국토부
[중장기 전략 수립]	
▪ 소득 3만불 시대 삶의 질 제고 전략 발표	기재부
▪ 경제 역동성 강화를 위한 생상선 혁신 전략 발표	기재부

7. 하반기 중점 추진 법률 개정 사항

법률 개정 과제	부처 · 기관
<p>「조세특례제한법」 개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상향 (법 개정안 통과 후 1년간, 공제율(대/중건/중소) : 1/3/7 → 2/5/10) ■ 투자세액공제(생산성향상시설 안전시설) 일몰 연장 ('19년말→'21년말) ■ 15년 이상 노후차 신차 교체시 개소세 한시 인하 (법 개정안 통과 후 6개월간, 개소세 70% 인하, 100만원 한도) ■ 수소전기차 개소세 감면 일몰 연장 ('19년말→'22년말) ■ 외국인관광객 미용·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 특례 적용 기한 연장 ('19년말→'20년말) ■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 확대 (2천만원→3천만원) ■ 벤처기업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 연장 ('19년말→'22년말) ■ 비과세 종합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일몰 연장 	기재부
<p>「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」 개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유턴기업 지원대상 업종 확대 (지식서비스업 추가) 	산업부
<p>「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」 및 「국유재산특례법」 개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유턴기업에 국·공유재산 사용 특례 제공 	기재부, 산업부
<p>「관세법」 개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수출입화물 선별검사 소요비용 국가 지원 	기재부, 관세청
<p>「벤처투자촉진법」 제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창투자·조합의 해외투자 한도(총자산, 출자금의 40%) 완화 	중기부

법을 개정 과제	부처·기관
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」 제정 ▪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	고용부
「고용보험법」 개정 ▪ 실업급여 지급액 인상 및 지급기간 연장	고용부
「남녀고용평등법」 및 「고용보험법」 개정 ▪ 배우자 출산 유급휴가 확대 (3→10일), 급여신설	고용부
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개정 ▪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축소	고용부
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」 개정 ▪ 고위험 직종 산재보험료 일부 일정기간 지원	고용부
「전기통신사업법」 및 「전파법」 시행령 개정 ▪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망 도매가 제공 의무기한('19.9월→'22.9월) 및 알뜰폰 전파사용료 감면기한('19년말→'22년말) 연장	과기정통부
「공정거래법」 개정 ▪ M&A 신고 대상에 스타트업 거액인수도 포함	공정위
「최저임금법」 개정 ▪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(최저임금위 이원화 등)	고용부
「근로기준법」 개정 ▪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개선 (단위기간 3→6개월로 확대 등)	고용부
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」 제정 ▪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	행안부
「소상공인·자영업 기본법」 제정 ▪ 소상공인·자영업자 정의 및 정책근거 확립 (정책협의회, 지원·보호 근거 등)	중기부

별첨 4

'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 결과

※ 일반국민 1,000명, 경제전문가 313명을 대상으로 조사(KDI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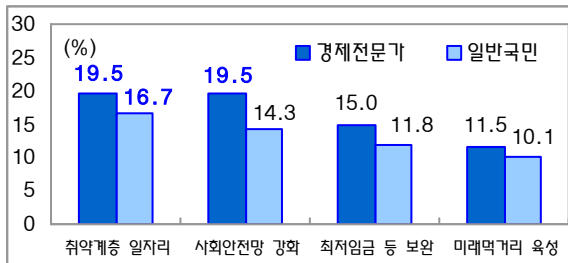
◇ 국민들은 경제활력 제고를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, 미래대비·포용성·혁신 등도 주요 과제로 평가

⇒ '19년 경제정책방향의 큰 틀(활력제고, 체질개선, 포용강화)을 견지하면서, 하반기에는 경제활력 제고에 최우선 방점을 두고 관련 정책을 적극 보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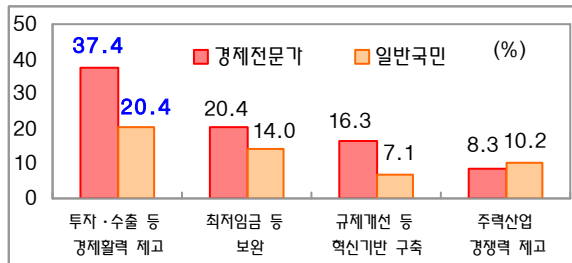
① (상반기 평가) 상반기 중 잘한 정책으로는 전문가·일반국민 모두 '취약계층 일자리 지원', '사회안전망 강화' 등을 지목

○ 상반기 추진한 정책 중 하반기 보완이 필요한 정책으로는 '투자·수출 등 경제활력 제고', '최저임금제 등 보완'을 지목

상반기 잘한 정책(상위 4개)



하반기 보완이 필요한 정책(상위 4개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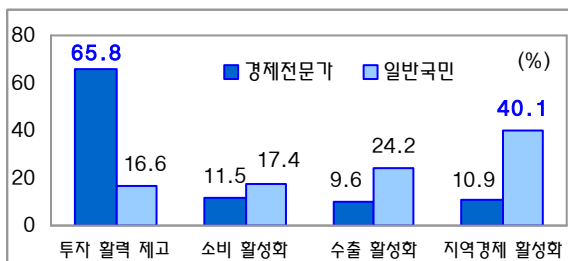
② (하반기 경제정책방향) 전문가·일반국민 모두 '경제활력 제고'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역점을 두어야 할 부문으로 지목

(%)	경제활력 제고	대내외 리스크 관리	산업혁신 통한 성장 가속화	인구구조 등 미래사회 대비	사회안전망 등 포용성 강화
전문가	43.1	20.8	21.1	8.3	4.5
일반국민	26.9	15.4	13.9	23.0	17.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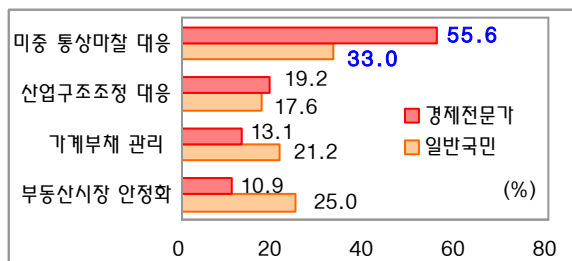
③ (경제활력 제고)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우선과제로 전문가는 '투자활력 제고', 일반국민은 '지역경제 활성화'를 지목

○ 대내외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'미중 통상마찰 대응'이 중요하다고 응답, 일반국민은 '부동산시장 안정화'에도 높은 응답

경제활력 제고 우선과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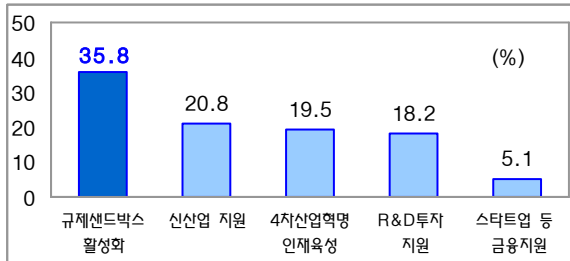
대내외 리스크 관리 우선과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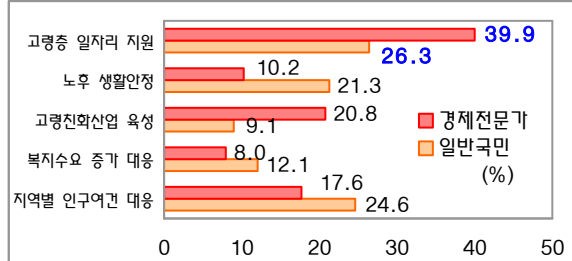
④ (체질개선·미래대비)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한 역점과제로는 '규제 샌드박스 활성화'를 지목, '신산업 지원', '인재육성' 등도 높은 응답

-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우선과제로 전문가·일반국민 모두 '고령층 일자리 지원'이 중요하다고 응답

혁신성장 역점 과제(전문가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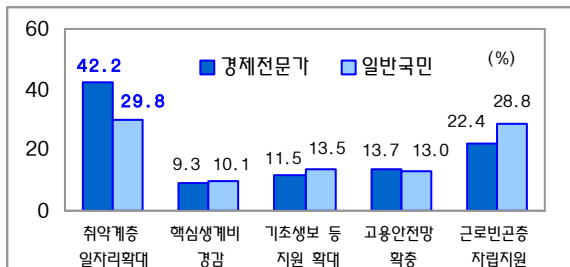
인구구조 변화 대응 우선과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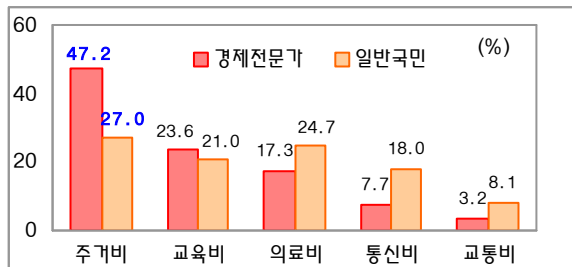
⑤ (포용성강화)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우선과제로 전문가·일반국민 모두 '취약계층 일자리 확대', '근로빈곤층 자립지원' 등을 지목

- 우선적으로 경감이 필요한 생계비로는 전문가·일반국민 모두 주거비를 지목, 교육비·의료비 등도 높은 응답

사회안전망 확충 우선과제



가장 경감이 필요한 생계비



[참고] '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오픈형 설문조사 결과

※ 전문가를 대상으로 정책제언을 오픈 설문으로 받아 '워드 클라우드' 작성



- ◇ 전문가들은 '기업', '투자', '활성화', '규제', '일자리' 등을 많이 언급
⇒ 기업투자 활성화, 규제 혁신, 일자리 창출 등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는 정책방향을 주문